
정책참고자료

2019-13호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실)



목 차



1 행정안전부

올해부터 미성년자·30세 미만 미혼 세대주의 주민세가 면제됩니다

- 일반 세대주는 7월 1일 기준 주소지에서 8월에 주민세 개인균등분 부과 -

2 국민권익위원회

강원 화천, 원주지역 주민 '생활 속 고충' 상담

- 4일 화천군, 5일 원주시 민원상담 이동신문고 운영 -

3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 불공정거래 피해구제를 위한 신고센터 69개로 확대

- 기존 운영 중인 29개 신고센터에 40개 사업자단체 추가 -

4 교육부

지자체 및 교육청(학교) 협력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 성과 확산

-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 1차 년도 성과보고회 개최 -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발표, 그후 4차산업혁명 어떻게 되고 있나?

- 인공지능스피커 400만대, 세계 최초의 5G 가입자 100만명 돌파,
인공지능 프로그램(오픈API) 이용수 7배 상승, 스마트 공장 7,903개 구축 -

6 문화체육관광부

저출생의 가장 큰 원인은 '일자리'와 '교육비'

- 문체부, 저출생 고령화 거대자료(빅데이터) 분석 결과 -

7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2020~2024년) 수립 추진

8 환경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3대 정책으로 개선

- 제도 개선, 측정체계 개편, 지도·점검 강화 등 3대 정책방향으로
사업장 관리 실효성 높여 미세먼지 감축 목표 달성 견인 -

9 고용노동부

'내 삶을 바꾼 '취업성공패키지', 10년간 115만 명 취업	54
- 취업자 1.5 → 22.5만 명, 1년 고용유지율 38.6 → 52% 등 양적·질적 성장 -	

10 여성가족부

양육비 지급 회피하는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도 주소·근무지 조회 가능	59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6월 25일부터 시행 -	

11 국토교통부

23개 시·군 맞춤형 사업에 국토부 450억원 지원	62
- 곡성·신안·완도·의성은 고령친화형 사업으로 첫 선정 -	

12 해양수산부

해양사고 발생 시 '선장 비상대응 매뉴얼' 나왔다	67
- '생명보호'에 최우선 가치, 선장의무에 비상상황 시 최종퇴선 등 기술 -	

올해부터 미성년자·30세 미만 미혼 세대주의 주민세가 면제됩니다

- 일반 세대주는 7월 1일 기준 주소지에서 8월에 주민세 개인균등분 부과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민법」상 미성년자(만 18세 이하)와 30세 미만 미혼자가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되더라도 올해부터는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면제한다고 안내했다.
-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과 법인, 사업주에 부과하는데, 이 중 개인균등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 주소지에서 1만원 이하에서 조례로 정한 세율로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 다만, 세대원 등에 대하여는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면제하므로 사실상 세대주에게 과세되고 있다.
 - 따라서, 주민등록상 부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녀는 납세의무가 없지만, 부모의 사망, 학업 등의 이유로 본인이 세대주가 되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 그러나, 미성년자와 학생·취업준비생 등은 생계능력이 없거나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고,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지방세법」을 개정('19.1.1. 시행)하여 이들에 대한 주민세를 면제하기로 한 것이다.

※ 30세 미만 1인 가구 102만 명('17년 기준, 국가통계포털)

- 다만, 부모 등의 성인이 미성년자와 함께 살면서 주민등록상 세대주를 미성년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면제 대상이 아니다.

□ 이 외에도 올해부터 주민세 제도 일부가 개선되었다.

- 작년까지는 8월 1일 기준 주소지에서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과세 하였으나,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같은 주민세 內 세목인 재산분의 과세기준일(7월 1일)과 동일하게 조정하였다.
- 외국인 세대주에 대한 주민세 개인균등분 과세 근거가 명확해졌으며, 종전에는 기초생활 수급권자인 사업주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주민세 개인사업자 균등분*을 무조건 비과세 하였으나, '사업소'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금이 사업주의 신상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올해부터는 사업주가 수급권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비과세 한다.

* (주민세 개인사업자 균등분)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사업자에게 사업소 별로 5만원씩 부과, 납기는 매년 8.16.~31.

□ 주민세 개인균등분 납부기간은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나, 올해 8월 31일은 토요일이므로 월요일인 9월 2일까지 납기가 연장된다.

-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과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씨디/에이티엠(CD/ATM)
기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고,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도
가능하다.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관할 시·군·구청 세정부서를 방문
하여 신청하면 자동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 또한, 올해부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가입자는 해당
스마트폰 앱을 통해 미리 신청하면,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보고
신용카드 간편결제를 통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납부까지
신청하면 최대 1,000원의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주민에게 힘이
되는 지방세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따뜻한 지방
세정을 구현하겠다.”라고 밝혔다.

강원 화천, 원주지역 주민 ‘생활 속 고충’ 상담

- 4일 화천군, 5일 원주시 민원상담 이동신문고 운영 -

- 강원도 화천군, 원주시 지역에서 행정·법률문제, 복지혜택 수급, 임금체불 등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4일 화천군청, 5일 원주시청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공공기관과 함께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 강원도 지역 ‘이동신문고’ 운영 일정 >

운영기관	강원 화천군	강원 원주시
일시	7. 4.(목) 10:00~16:00	7. 5.(금) 10:00~16:00
장소	군청 4층 대회의실	시청 지하1층 대회의실

※ 인근 지자체(춘천시, 철원군, 횡성군) 주민도 포함하여 상담

- ‘이동신문고’는 분야별 전문조사관과 협력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현장의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현장 중심의 고충민원 상담 활동이다. 2018년에는 84개 지역을 방문하고 2,163건의 민원을 상담했다.

상담분야는 일반행정, 문화, 교육, 국방, 보훈, 노동, 산업, 농림, 환경,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세무, 주택, 건축, 경찰 등 모든 행정 분

야이다.

이동신문고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도 참여해 법률·소비자피해·사회복지 등 다양한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하고, 각종 부패행위, 건강·안전·환경·소비자의 이익 등 공익침해행위 등에 대한 신고도 받는다.

또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좋은 이웃들’ 복지사업과 연계해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을 발굴하여 해결할 예정이며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임금체불 등에 관한 상담도 병행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상담 중 바로 해결 가능하거나 단순 궁금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심층 조사와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처리한다.

-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앞으로도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민원 취약분야 해소’를 위해 소외지역 및 사회적 약자를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라며 “몸이 불편하거나 거리가 멀어서 국민권익위의 고충민원 상담 등을 이용하지 못했던 지역 주민들께서는 이번 이동신문고를 방문해 다양한 고충들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붙임> 지역형 이동신문고 상담분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상담분야			
행정 문화 교육	(행정,안전)공유재산(시유지), 주민 등록, 재난, 마을안길, 소하천, 지자체 발주계약, 출입국, 비자문제 (문화관광)문화재, 관광, 체육 (교육)교육전반, 학교관리, 학사운영, 장학	산업 농림 환경	(산업)통상, 특허, 전기, 석유, 광업, 천연 도시가스, 우정사업 (농림)농정, 농산, 농지,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축산, 양정, 농·축협, 산림행정 (환경)대기환경, 수질환경, 상수원· 먹는샘물, 자연공원, 상·하수도, 폐기물, 토양오염 (해양)해양수산, 수협, 해운항만
	국방 보훈		(군사,국방)현역장병 관련 민원, 군사시설보호구역, 국방행정, 병무 행정 (보훈)유공자 등록 등(보훈처 관련)
경찰	경찰수사, 치안·방법·집회시위, 교통사고조사, 교통법규위반 단속, 운전면허, 교통안전시설(신호기· 횡단보도·안전표시·단속 장비 등), 해양경찰, 특별사법경찰 등	도시 수자원	도시계획(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 수자원(하천, 댐관리), 택지개발, 개발제한구역, 개발행위
재정 세무	국세, 지방세, 관세, 국유지, 금융	교통 도로	도로, 교통, 항공, 철도, 교량, 지하철, 방음벽, 도로 또는 철도 편입에 따른 잔여지 매수
복지 노동	(복지)기초수급, 장사, 복지(노인, 장애인), 보건, 건강보험, 국민연금, 기초연금, 여성가족(영유아보육), 공중위생 등 (노동)근로기준, 고용보험, 산재보험, 직업안정, 임금채권보장 등		
협업기관 상담분야			
사회복지	제도권 밖 비수급 빈곤층 지원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좋은이웃들”사업		
생활법률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관이 민사, 형사, 호적 등 생활법률상담		
소비자피해	한국소비자원 상담관이 소비자피해 관련 상담		
지적(地籍)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토지 관련 지적(地籍) 분쟁 상담		
노동관계	고용노동부 상담관이 노동관계문제, 임금체불 등 상담		

중기부, 불공정거래 피해구제를 위한 신고센터 69개로 확대

- 기존 운영 중인 29개 신고센터에 40개 사업자단체 추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업밀착형 신고채널 확대를 위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40개 사업자단체를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로 추가 지정하고, 2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센터 개소식을 개최하였다.

< 신고센터 개소식 개요 >

- (일시 및 장소) 7. 2(화) 14:00 ~ 16:00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참석자)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
- (내 용) 신고센터 현판 제막식 및 신고센터 운영요령, 상생법 등 설명

중기부는 그간 본부와 12개 지방청,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중심으로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해 왔으나, 피해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사업자단체 중심으로 신고센터를 확대해 왔다.

2017년 10월 중소기업중앙회 등 사업자단체 15개를 신고센터로 추가 한데 이어, 이번에 40개 사업자단체를 추가함에 따라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는 총 69개로 확대되었다.

신고센터 확대와 함께 중기부 대표번호 1357에 불공정거래 신고 전용 내선번호(9번)를 연계하여 전담 변호사와 법률 전문상담도 진행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피해기업에 대한 법률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 부산, 광주·전남, 대구·경북, 경기지방청에서는 각 지역 변호사회의 지원을 받아 100여명의 변호사가 중소기업 법률상담 및 전문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7년 10월 신고센터 증설한 이후 불공정거래 피해에 대한 상담, 조사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조정절차를 통한 최종 합의 안도 도출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구제로까지 연결되고 있다.

* 상담건수 : ('17) 677건 → ('18) 1,200건(77.2% 증가)

** 조사건수 : ('17) 7건 → ('18) 29건(314% 증가)

사 례	■ 경기소재 K기업은 위탁기업 H사가 토목측량 용역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던 중 중기부의 불공정거래신고센터에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현장조사 등 피해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통하여 용역비용 2억 원을 지급받음 ■ D사는 H사로부터 군수정보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를 위탁받은 이후, H사가 추가개발을 요구하며 추가개발비를 D사에 전가시키자 D사는 신고센터를 통해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절차를 진행하여 1억 7천만원을 지급받음
-----	---

중기부는 이번에 확대한 신고센터가 안정화되어 상담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워크숍, 전문가 교육, 사례발표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필요 시 현장 방문을 통한 교육도 실시할 것이다.

중기부 박종찬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신고센터 확대를 계기로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인 피해구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추진배경

-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확대설치*에 따른 중소기업단체 개소식 및 신고센터 담당자 등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 (국정과제) 중소기업 단체 교섭력 강화

* (기존) 14개(본부, 12개 지방청, 재단) → ('17.11월) 29개 → ('19.6월) 40개(총69개)

□ 개소식 계획

- (일 시) '19. 7. 2(화) 14:00 ~ 16:00
- (장 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1층 * 서울 강남구 역삼로 221 소재
- (참 석 자) 중기부, 협력재단, 신규신고센터 담당자 등 50명

* 제막식 주요참석자 :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 (주요내용)

- 신규 신고센터 현판식
-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운영요령 안내
- 상생법 및 관련 제도 등 실무교육

□ 세부일정

구 분	시 간		비 고
현판식	14:00~14:10	10"	현판식 및 기념촬영 (상생협력정책관, 여경협회장 등)
인사말씀	14:10~14:20	10"	상생협력정책관, 여경협회장
교 육	14:20~14:50	30"	① 신고센터 운영요령(중기부)
	14:50 ~ 15:50	60"	② 상생법 교육(협력재단)
	15:50~16:00	10"	③ 질의응답(전체)

지자체 및 교육청(학교) 협력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 성과 확산

-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 1차 년도 성과보고회 개최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관계부처(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합동으로 6.25(화)에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 1차 년도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 선도사업은 초등학생 돌봄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온종일 돌봄 정책*('18.4.)'에 따른 것으로

* 초등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학교 및 마을 협력을 통해 빈틈없는 돌봄체계 구축
(초등돌봄서비스 확대 : '17년 33만 명 → '22년까지 53만 명)

○ 지역 특성에 맞는 지자체 중심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8년 6월에 공모로 선정된 9개 지자체*가 참여하였다.

* (서울) 구로구, 노원구, 성동구, 성북구 (대전) 서구 (경기) 시흥시, 오산시 (충남) 홍성군 (전남) 광양시

□ 이번 선도사업 성과보고회는 중앙 부처, 광역·기초 지자체, 시·도 교육(지원)청 등 국가 또는 지역 단위에서 초등학생 대상 돌봄을 추진하는 각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여,

○ 1차 년도('18. 7월 ~ '19. 6월) 사업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여 우수한 돌봄모델을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선도사업 참여 지자체는 지자체 돌봄 전담조직(과, 팀) 설치, 돌봄

기관 간 소통·협력을 위한 지역돌봄협의체 구성·운영 및 온종일 돌봄 조례 제정* 등 지역의 돌봄 기반을 구축하였고,

* 지자체장의 책무, 돌봄 종합계획 수립, 돌봄 사업 추진 및 지역돌봄협의체 구성 등을 규정

- 지자체-교육청(학교) 협력을 통해 돌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돌봄 모델을 운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선도사업 우수 모델 》

① 지역 유휴공간 활용

- ▷ (서울 노원구) ‘노원구 돌봄 네트워크지원단’ 운영 및 아파트 내 유휴공간 등을 활용하여 ‘우리동네 아이휴센터’를 설치(6개소)하고, 놀이 및 독서지도 등 실시
- ▷ (서울 성동구) 아파트단지, 작은 도서관 등을 활용하여 초등돌봄센터 ‘아이꿈누리터(4개소)’ 설치·운영, 돌봄 공동체 확산을 위한 ‘이웃돌봄’ 운영 등
 - ※ 초등돌봄 서포터즈 구성·운영 및 돌봄인력 직무교육과정(21개 과목) 운영 등
- ▷ (경기 시흥시) 권역별 거점 초등돌봄센터(아이누리 돌봄센터 1개소), 주민 대상 돌봄 공모사업(아이누리 돌봄나눔터 9개소) 추진 및 시흥형 돌봄 모델(세대공감 마을학교형, 공공도서관형, 작은도서관형 등) 운영 등

② 학교 내 활용가능교실 이용

- ▷ (충남 홍성군) 홍성초(1실), 홍주초(2실)의 활용가능교실을 이용하여 지자체 돌봄 운영 및 LH아파트 단지 내에 아동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은 축사에서 선도사업에 참여한 지자체 및 관련 기관의 돌봄 추진을 위한 노력을 격려하고,

- 대구대 김민희 교수(선도사업 평가·컨설팅위원장)의 ‘선도사업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한 주제 발표와 4개 지역 선도사업 지자체* 및 우수 지자체(서울 중구**)의 돌봄 운영과정, 성과 등에 대해 발표가 이루어졌다.

* 서울 노원구, 서울 성동구, 경기 시흥시, 충남 홍성군

** 학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홍인초(3실)** 내 **활용가능교실**을 이용하여 ‘모든 아이 돌봄교실’ 운영(돌봄인력, 프로그램 및 예산 지원 등)

- 특히, 지역 돌봄을 확대하기 위한 **지자체와 교육청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다른 지역의 돌봄 운영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 **선도사업** 지자체와 성과보고회에 참여한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을 지역 유형*에 따라 **6개 그룹**으로 구성하여 참여기관 간 세부적인 토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 △ 광역시 자치구형, △ 도시형, △ 도·농 복합형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성과보고회를 통해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학교, 지역 내 돌봄기관이 함께 협력하여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돌봄 생태계가 구축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 앞으로도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돌봄을 추진해 나가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최대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 성과보고회 개최계획
2.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 우수사례

□ 개요

- (목적)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의 1차 년도('18.7월 ~ '19.6월) 성과 공유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 선도사업 개요 》

- (총 사업비) 총 80억 원
- (사업기간/지원규모) 3년('18~'20) / 9개 지자체*
* (서울 구로구, 노원구, 성동구, 성북구(대전 서구(경기) 시흥시, 오산시(충남) 홍성군(전남) 광양시
- (사업내용) 돌봄 전담조직 설치 및 조례 제정 등 인프라 구축, 돌봄서비스 운영 확대 및 질 관리, 지역 돌봄 수요 파악 및 매칭 등
- (추진체계)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 및 사업 컨설팅단 구성·운영

- (일시/장소) '19. 6. 25.(화) 13:30~17:30 / 서울 세종대 컨벤션센터(광개토관)
- (참석자) 350명 내외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등
 - 관계부처(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및 유관기관 등
 - 지자체(광역·기초)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

□ 진행일정 : 총 4시간

시 간	내 용
13:30~14:00 ('30)	▪ 등록 확인 및 홍보영상 관람
14:00~14:15 ('15)	▪ 개회사(한국교육개발원장) ▪ 축사(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
14:15~14:50 ('35)	▪ 주제발표(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 성과 및 과제 관련) - 김민희(대구대학교 교수 / 선도사업 평가·컨설팅위원장)
14:50~15:40 ('50)	▪ 사례발표(5개 지자체) - 서울 노원구·성동구, 경기 시흥시, 충남 홍성군, 서울 중구
15:40~16:00 ('20)	▪ 휴식 및 그룹별 이동
16:00~17:30 ('90)	▪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 그룹별 토의(컨퍼런스) - 선도사업 지자체와 참여 지자체·교육(지원)청 매칭
17:30~	폐회

참고2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 우수사례

서울 구로구 다함께 행복한 온(溫) 돌봄공동체 만들기

구로구에서는 학부모도 아이들도 안정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집 가깝고 편안한 공간을 찾던 중 다른 지역보다 구내에 도서관이 많은 점에 착안하여 구로구 초등 ‘온종일 돌봄센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온종일 돌봄센터’는 주거 지역에서 가깝고, 주민이 많이 모이는 작은도서관과 마을활력소 등의 공간에 구청이 운영비를 지원하고, 학부모와 주민이 주축이 되어 직접 방과후의 아동들을 돌봐주는 곳이다. ’ 18.12월부터 ’ 19.2월까지 9개 기관에서 시범 운영하였으며, ’ 19.3월부터 참여 기관을 24곳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각기관에서는 20명 내외의 아동을 방과후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돌봐 주고 있으며, 독서지도, 신체활동, 모둠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학원 챙겨보내기, 숙제 봐주기 등을 도와주며 간식도 제공하고 있다.

구로구는 ’ 22년까지 총 50곳으로 참여 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며, 아이들이 마을 안에서 밝고 건강하게 자랄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아이들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 노원구 아동 친화 돌봄생태계 구축 및 '우리동네 아이휴(休)센터' 조성

서울 노원구는 빈틈없는 돌봄 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노원구 돌봄 네트워크지원단’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 돌봄 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고, 노원형 돌봄 벨트를 탄탄히 구축해 나가고 있다.



‘노원구 돌봄 네트워크지원단’이 중심이 되어, 노원형 돌봄 센터는 ‘도보 10분 이내의 거리에 있어야 한다.’라는 목표로 다양한 공간을 찾았고, 공공 복합시설, 작은도서관, 마을 커뮤니티, 경로당, 아파트 등을 활용하여 노원형 초등 방과후 돌봄 ‘아이휴(休)센터’를 조성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총 6개를 개소하여 운영 중이다.

‘아이휴(休)센터’는 학기중에는 오후 1시부터 저녁 9시까지, 방학중에는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하며,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등교 전 돌봄도 운영한다. 독서와 예체능 활동이 주가 되는 아이휴(休)센터는 아이들이 먼저 찾아오고 싶은 곳이 되었으며, 자녀의 일정을 고려한 센터 이용을 통해 보호자들은 심적·경제적 걱정을 덜게 되었다.

노원구는 ’ 22년까지 총 40개소를 확충해 맞벌이 가정 초등 저학년 1,000명에게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안심(安心) 동심(童心) 노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 성동구 온 마을 행복돌봄 한울타리 네트워크

성동구는 ‘이동을 중심으로 한 지역 중심 행복 돌봄터 성동’을 목표로 돌봄 인프라 구축 및 다양한 형태의 방과후 돌봄을 책임지는 성동의 특화된 돌봄 생태계 구축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성동구는 우선 방과후 초등돌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성동구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였고, 초등돌봄 전담팀 신설, ‘초등돌봄 서포터즈’ 양성, ‘이웃돌봄’ 운영, 초등돌봄 포털시스템 구축 등 초등돌봄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였다.

‘초등돌봄 서포터즈’란 초등돌봄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돌봄 관련 교육 이수(30시간) 후, 지역 내 초등돌봄 기관에서 직접 기획한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민 중심 돌봄 공동체로 30명이 위촉되어 돌봄기관 등에서 놀이지도 활동을 하고 있다. 더불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이웃 간 돌봄이 이루어지는 ‘이웃돌봄’ 21가구를 선발하여 시범 운영하고 있다.

성동구 관내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모아 한눈에 쉽게 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돌봄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지자체 최초로 초등돌봄 포털시스템도 구축하였다.

성동구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초등돌봄공간 조성을 위해 성동형 초등돌봄센터인 ‘아이꿈누리터’ 운영을 시작하였다. ‘아이꿈누리터’는 놀이와 쉼, 배움이 어우러진 돌봄센터로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1~6학년 초등학생들을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보살피고 있다. 현재 아파트 커뮤니티 공간, 주민센터 내 작은도서관, 초등학교 인접지역 종교시설 내 유휴공간 등을 활용하여 4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향후 7개소를 더 확충할 계획이다.

성동구는 아파트 단지, 작은도서관, 주민 공유 공간 등을 적극 활용하여 ‘22년까지 공적돌봄 수요 100% 달성을 목표로 아이꿈누리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방침이며, 촘촘한 온마을 돌봄체계 확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서울 성북구 아이를 돌보는 마을, 아동친화도시 성북

서울 성북구는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 지자체로 선정된 후 온종일돌봄TF팀을 조직, 교육지원청과 협약체결, 온종일 돌봄 사업추진위원회 구성·운영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다.

성북구는 직접적인 돌봄시설의 확충보다는 성북구 관내 초등돌봄 영역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돌봄교사 역량 강화 교육을 운영하여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특히, 온종일 돌봄시설의 아동 놀권리 보장을 위해 119개 모든

성북구 돌봄시설내 보드게임 보급을 목표로 보드게임 강사양성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이를 통해 38명이 보드게임 강사자격을 취득하여 아동의 놀권리 보장과 확대를 위해 현장에서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틈새돌봄기관 등 다양한 돌봄 주체들이 모여 아이들을 중심에 두고 돌봄 현안을 풀어나가기 위해 설명회, 연합워크숍, 청소년정책디자인 원탁토론회 등을 진행하였다.

앞으로, 성북구는 기존 틈새돌봄의 실내중심 활동을 실외활동으로 확장한 울타리형 모델을 통해 마을형·아파트형·학교형 등 수시돌봄의 새로운 형태를 발굴해 나갈 것이며, 생활권중심·놀이중심의 촘촘한 돌봄망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 나갈 것이다.



대전 서구

온 마을이 함께 돌보는 우리 아이들, 함께 행복한 서구 아이돌봄네트워크(C.C.N) 만들기

대전 서구는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 공모에서 전국 광역시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었으며, 함께 행복한 서구 ‘아이행복돌봄터’ 사업 추진을 위해 기존 학교 돌봄교실 외에 아파트 단지 내 유휴공간과 지역의 작은도서관을 활용한 마을돌봄 교실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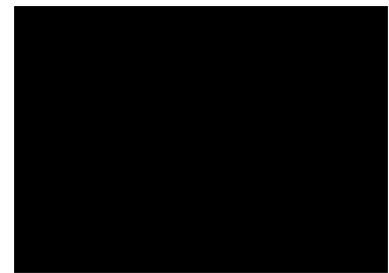
우선,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작은 도서관을 활용한 ‘지치울 아이행복돌봄터’를 개소(19.4월)하였다. 지역 내 아동 20여 명이 방과후 오후 1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이용 가능하며, 학습·독서·인성지도, 캘리그래피, 악기연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다. 주택가에 위치한 센터는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이 높아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통한 돌봄과 교육이 함께 이루어질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가능하다.

’ 19.6월 중 아파트 단지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아이행복돌봄터 3개소(탄방동, 관저동, 도안동)를 개소하며, ’ 20년까지 총 6곳을 개소할 계획이다. 아이와 부모 모두가 함께 행복한 아이 키우기 좋은 서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경기 시흥시

시흥형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시흥시는 학교나 집에서 가깝고, 퇴근 후에 마음 편히 아이를 찾을 수 있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흥시만의 돌봄브랜드인 ‘아이누리’를 개발하여 돌봄센터 및 돌봄나눔터, 시흥형 돌봄 모델 발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이누리 돌봄센터’는 지역사회가 돌봄 공간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리모델링과 돌봄인력을 지원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속 초등돌봄센터로, 권역별 거점 역할을 수행하며, 현재 1개소(북부권 ‘은계센트럴타운점’)가 운영 중이다.

‘아이누리 돌봄나눔터’는 복지관, 마을학교, 작은도서관 등 주민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하여 주민들이 직접 아이들을 돌보는 센터로 북부·중부·남부 3개 권역에 총 9개소가 운영 중이다.

또한 시흥시에서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돋보이는 ‘시흥형 돌봄 모델’을 발굴하였다. 노인과 함께 하는 세대공감 마을학교형, 도서관에서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공공도서관형, 작은도서관을 이용한 독서 및 특기적성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작은도서관형, 방과후 특기적성이 이루어지는 마을학교형, 체육회 및 관련 공동체가 운동·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스포츠 마을학교형, 청소년수련관 등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청소년 전용공간형이 현재 운영 중이다.

만6~12세의 돌봄이 필요한 아동은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학기중에는 오후 1시부터 오후 7시까지, 방학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한다. 독서지도, 학습지도, 예체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중이며 급·간식을 지원한다.

현재 시흥시에서는 16개소에서 온종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450여 명의 아동들이 돌봄을 받고 있다. 시흥시는 앞으로도 민간 기관 및 단체와 손잡고 ‘아이 키우기 걱정 없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경기 오산시 오산형 온종일 돌봄 '함께자람'

오산시는 초등학생 및 학부모 약 2만 3천 명을 대상으로 초등돌봄 실태 및 수요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돌봄 형태, 수요, 프로그램, 선호 장소, 인력, 돌봄 방식 등 유의미한 데이터를 통해 수요자 맞춤형의 오산형 온종일돌봄 ‘함께(아이+부모+마을)자람’ 사업 계획을 수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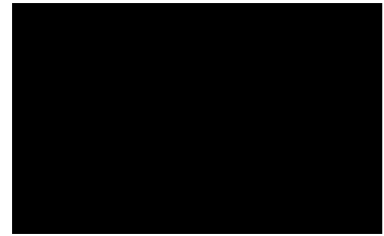
오산시는 아이들이 가장 원하는 장소(나의 집)에 학부모가 원하는 안전성(학교)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동의 접근성 및 안전성이 높은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함께자람’ 센터 공간을 마련하였다.

‘함께자람’ 센터는 초등학생들이 방과 후 안전하게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마을에서 아이들을 보듬을 수 있도록 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 마을자원을 투입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학기중에는 오후 1시부터 오후 7시까지, 방학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맞벌이 부부, 다자녀 가구 등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현재 28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다.

아이들은 휴식과 기본적인 돌봄서비스 외에도 하루 한 시간, 주 4일 마을자원을 연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오산교육재단, 오산체육회, 오산백년시민대학 등에서 양성된 시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오산시는 함께자람센터 1호점(’ 18. 11월), 2호점(’ 19. 7월 개소 예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 21년까지 30개소(돌봄수요 : 전체 초등학생의 약 30%)를 확충해 돌봄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충남 홍성군 도농복합형 지역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 '아이들세상'

홍성군 방과후돌봄센터 ‘아이들세상’은 맞벌이 가정이 겪는 아동돌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홍성군이 직접 운영하는 초등방과후 돌봄센터이다.

‘아이들세상’은 초등학교 활용가능교실을 이용한 돌봄과 마을이 함께 돌보는 아동통합지원센터 등 3개소에서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학기중에는 오후 1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방학중에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주 5일 급식과 간식을 제공하고 있다.

초등학교 활용가능교실을 이용한 학교돌봄은 홍성읍을 중심으로 홍성초 1개 교실, 홍주초 2개 교실, 충 3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활용가능교실을 이용하여 지자체가 운영하는 전국 최초 사례이다. 홍주초 돌봄교실은 인근 초등학교 학생도 참여하는 거점형 돌봄센터로 통학차량도 운행한다.

LH아파트내 아동통합지원센터는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돌봄센터로 초등방과후 돌봄센터 뿐만 아니라 공동육아나눔터, 급식소, 청소년동아리방, 작은도서관, 독서실, 가족카페 등 총 7개의 시설을 운영중에 있다. 이를 통해서 영유아부터 청소년, 가족까지 모두 이용 가능한 가족중심의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돌봄수요가 많은 신도시 지역에서 마을과 연계하여 설치하여 홍성군이 직접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홍성군은 학교와 지역주민, 지자체가 함께 협력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홍성군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전남 광양시 다함께 · 온종일 돌봄사업

광양시는 호남권에서 유일하게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 추진 지자체로 선정되었으며, 전남교육청과 협력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광양시는 지난 3월 광양제철초에서 지자체-학교 협업 돌봄센터 ‘마로니에 돌봄센터’를 개소하였다.

광양제철초에서 제공한 활용가능교실 2실을 광양시에서 리모델링하고, 예산 지원을 통해 학교에서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오후 7시까지 맞벌이와 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의 초등학생들에게 안전한 보살핌을 제공하고 있다.

광양시는 청소년문화의 집 내에 기존의 공간을 재배치하여 ‘가온누리 돌봄센터’도 개소하였다. 기존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와 연계하여 놓여준 아동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광양시는 향후 온종일 ‘돌봄센터’ 계속 설치를 위해 지역내 기존 아파트의 공간을 활용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19.5월)하여 ‘돌봄센터’ 설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더불어, 경력단절 여성들이 이웃집 아이들에게 방과후 돌봄과 간단한 학습을 제공하는 ‘초등 이웃돌봄 히어로(HERO)’ 서비스도 실시할 예정이다. ‘초등 이웃돌봄 히어로’는 이웃에서 돌봄 공백 없이 퇴근 시간까지 안심할 수 있도록 돌봐주는 사업으로, 이웃집의 1~2학년 초등학생 3~4명을 대상으로 방과후부터 오후 7시까지 히어로의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다. ’19년 올해 히어로 20여 명을 선발하여 ’20년 2월 까지 시범 운영하고 성과를 평가한 후에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광양시는 지속적으로 초등학교의 돌봄과 연계하고, 마을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틈새 없는 촘촘한 돌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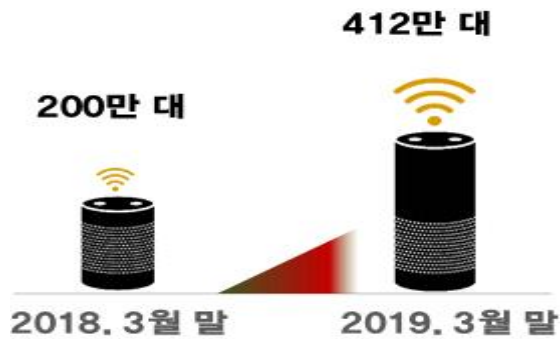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발표, 그후 4차산업혁명 어떻게 되고 있나?

- 인공지능스피커 400만대, 세계 최초의 5G 가입자 100만명 돌파,
인공지능 프로그램(오픈API) 이용수 7배 상승, 스마트 공장 7,903개 구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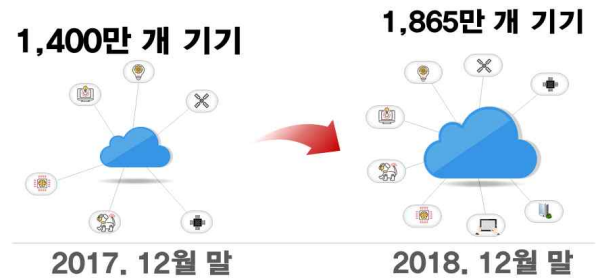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AI) 스피커(네트워크), 드론·자율주행차(이동체), 핀테크 사업체(금융/물류), 스마트 공장(제조) 등 분야별 4차 산업혁명 지표를 발표하였다.
 - 이번 발표는 정부가 2017년 11월 수립·발표한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I-KOREA 4.0)」과 관련, 4차 산업혁명 추진상황을 국민과 기업이 알기 쉽고 관심 있을 만한 지표로 선정·조사한 것이다.
 - 4차 산업혁명 지표는 각 부처의 협조를 얻어 작성하였으며, 총 33개 지표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 기준일 : 3월말 기준(기존통계 등 기준일이 다른 경우에는 조사기준일 명시)
-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이동통신 3사와 네이버, 카카오를 통해 판매된 인공지능(AI) 스피커 대수(누적)는 412만대로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
 - 4차 산업혁명 근간인 초연결 사회로의 진입 현황을 알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가입수*는 1,865만개로 (2018.12월 기준) 전년대비 33.2% 증가

* 원격검침 + 사물간 통신(M2M) + 홈네트워크 가입 수

< 인공지능(AI) 스피커 판매대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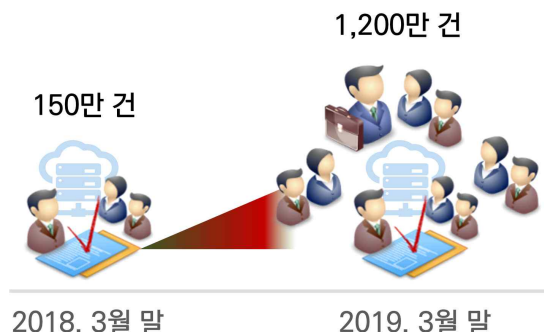


< IoT 기기 연결대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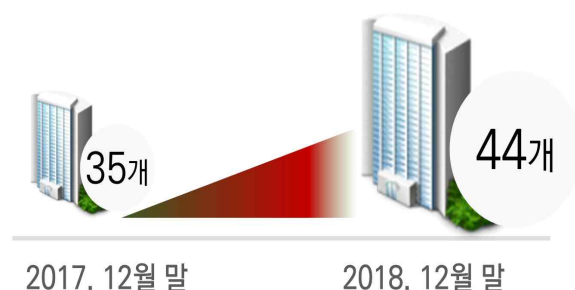


- 올해 4월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5세대(5G)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100만 명을 돌파('19.6.10.기준)
- 5G 등 빠르게 진화하는 네트워크 환경에 선제적 대응하기 위해 올해 처음 서비스하는 10기가 인터넷망 전국 인터넷 가능지역(전국 커버리지)은 6.86%
- (지능화 기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때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개발·개방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오픈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이용수는 1,200만건으로 전년대비 7배 대폭 상승
-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인 지능화 기술 관련한 인공지능 전문기업 수는 44개(2018년 기준)로 전년대비 25.7% 증가
- 앱 마켓(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올라온 가상현실/증강현실(VR/AR) 앱 업로드 수는 7,065건(2019.4월말 기준)

< 인공지능 오픈 API 이용 수 >



< 인공지능 전문기업 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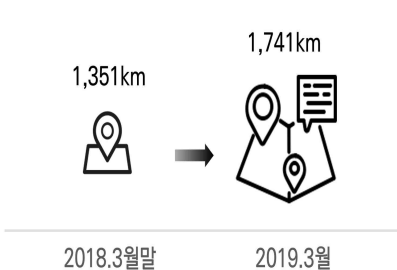


- (스마트 이동체) 자율주행자동차용 정밀지도는 1,741km (전년대비 28.9% ↑), 자율차를 위한 첨단 도로 시스템(C-ITS)*은 323km(전년대비 267% ↑)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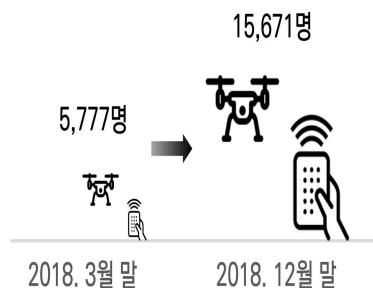
* 차량이 도로 인프라 또는 다른 차량과 서로 통신하여 주행 중 주변교통상황, 급정거, 낙하물 등의 사고위험을 실시간 제공받아 교통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해 국토부로부터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은 62대로 전년대비 40.9% 확대
- 이와 함께 스마트 이동체의 대표주자인 드론 조종자격 취득자수는 전년보다 만여명이 늘어난 15,671명(2018.12월말)
- 상업용(또는 12kg 이상, 신고대상) 드론은 7,177대(2018.12월말)로 전년대비 60.0%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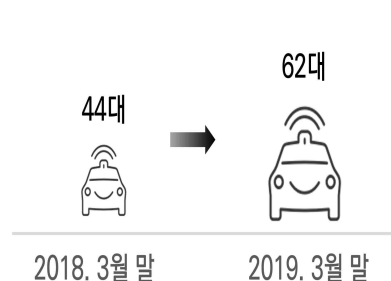
<정밀도로지도 구축>



<드론 조종자격 취득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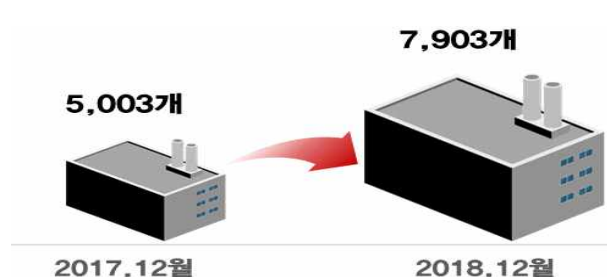
<자율주행차 임시허가 대수>



- (제조) 중소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공장(누적)은 7,903개(2018.12월)로 정부는 2022년까지 3만개 구축 계획

- 제조업용 로봇 생산액은 3조 181억원(2017년 기준)으로 13.1%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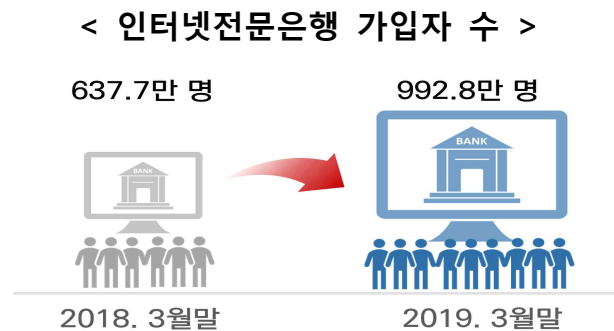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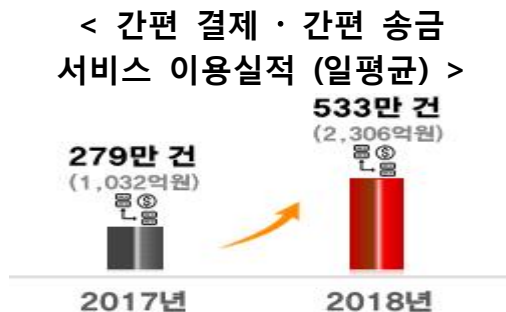
< 스마트공장 수 >



< 제조업용 로봇 생산액 >



- (금융/물류) 간편결제·간편송금 서비스 이용실적은 일평균 533만건, 2,306억원(2018년도)으로 전년대비 건수는 91%, 금액은 123.4% 증가
- 카카오 बैं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 계좌수 및 가입자수는 1,590만 계좌, 993만명으로 전년대비 각각 73.1%, 55.7% 증가
- 혁신적인 핀테크 기술이 보급되고 확산됨에 따라 핀테크 업체수는 전년대비 4.9% 증가한 301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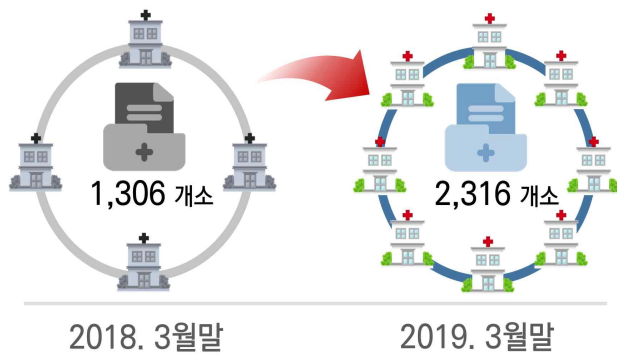
- (의료) 환자의 진료정보*를 환자가 아닌 의료기관간 안전하게 교류하여 환자의 불편함을 해소한 의료기관 진료정보 전자교류 참여병원 수(누적)는 2,316개소로 전년대비 77.3% 증가

* 진료정보교류에 동의한 환자의 진단, 투약 등 진료기록 및 CT, MRI 등 영상정보 등

- (에너지) 에너지신산업 기반 확대를 위한 스마트그리드확산사업을 통해 도입된 에너지관리시스템(EMS)*은 564개로 전년대비 34.3% 증가

* Energy Management System, 소비전력체크(모니터링), 센서감지, 제어장치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도록 하는 제어 시스템

< 진료정보 전자교류 참여병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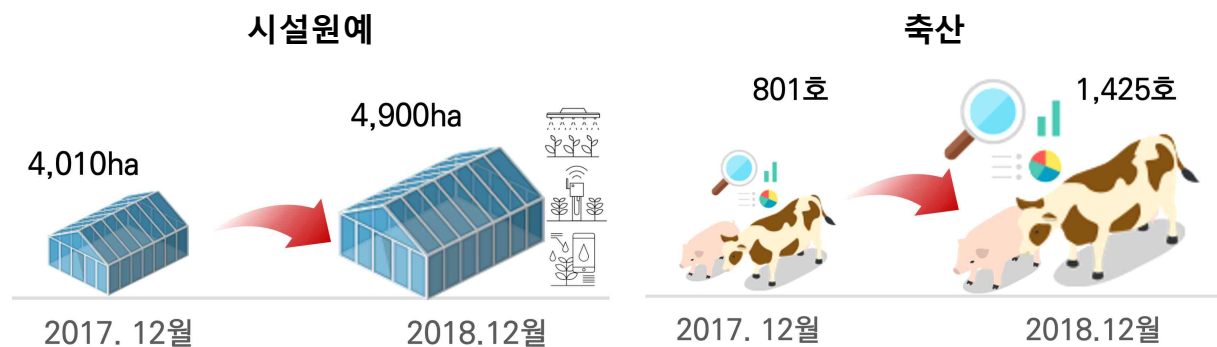


< 에너지관리 시스템(EMS) >



- (시티) 정보통신기술(ICT) 혁신 플랫폼으로 교통, 방범, 환경 등 도시문제를 해결·관리하기 위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에 참여한 지자체*는 전년보다 15개 증가한 37개 도시로 확산
- (농수산업) 농수산업 분야도 4차산업혁명의 영향으로 ICT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팜이 확대되어, 시설원예는 22.2% 증가한 4,900ha(헥타르), 축산은 77.9% 증가한 1,425호

< 스마트 팜 확산 >



□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4차 산업혁명 추진 지표를 통해 국민이 변화된 수치로 쉽게 4차 산업 혁명을 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히며, “앞으로 우리나라의 4차산업 혁명이 잘 추진될 있도록 국민적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기준일 : 2019. 3월말 / 2018. 3월말)

※ 기준일이 다를 경우 별도 표시

구분	지표	조사값			관련 부처/부서
		2018	2019	증감률	
1-1. 지능화 기반산업 혁신					
의료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전자교류 참여병원 수	1,306개소	2,316개소	77.3%	복지부 복지부 마이차트
	암 유전체 수 (암 유전체 확보 건수)	348건 (’18.5월 말)	2,949건 (’19.5월 말)	-	복지부 (암정밀의료사업단)
제조	스마트 공장 수	5,003개 (누적, ’17.12월말)	7,903개 (누적, ’18.12월말)	-	중기부
	제조로봇 생산액	2조 6,687억 (2016.1~12월)	3조 181억원 (’17.1 ~ 12월)	13.1%	로봇산업 실태조사 (산업부)
이동체	자율주행자동차용 정밀도로지도 구축	1,351km	1,741km	28.9%	국토부
	드론 조종자격 취득자 수	5,777명 (2018.3월 말)	15,671명 (2018. 12월 말)	171.3%	국토부
	드론 기체 신고대수 (상업용 또는 12Kg 초과)	4,514개 (2018.3월 말)	7,177대 (2018. 12월 말)	60.0%	국토부
	자율주행자동차 대수	44대	62대	40.9%	국토부
	자율차 R&D 전문인력 양성	49명 (2017.12월)	160명 (2018.1 ~ 12월)	226.5%	산업부
에너지	지능형원격검침시스템	약12만호	15만호	10.4%	산업부
	에너지 관리 시스템 (EMS)	420여개소	564개소	34.3%	산업부
금융/물류	인터넷전문은행 계좌수 /가입자 수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계좌수 : 9,188,827개 고객수 : 637.7만명	계좌수 : 15,904,291개 / 고객수 : 992.8만명	계좌수 : 73.1% 고객수: 55.7%	금융위원회
	전자금융업 총 매출액	3.80조원 (2017년도)	4.44조원 (2018년도)	16.8%	금융위원회
	핀테크 업체수	287개	301개	4.9%	금융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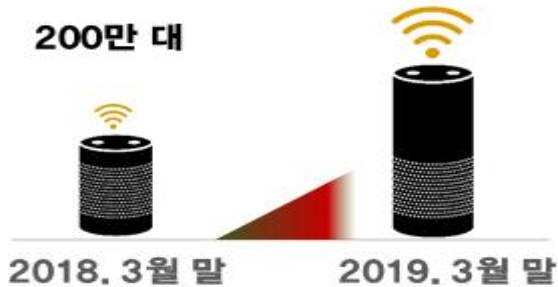
구분	지표	조사값			관련 부처/부서
		2018	2019	증감률	
		(2018년 12월)	(2019년 3월)		
	물류자율운송 로봇 수	5대	6대	20%	국토부
	간편결제 · 간편송금 서비스 이용실적 (일평균)	279만건, 1,032억원 (2017년)	533만건, 2,306억원 (2018년)	건수: 91% 금액: 123.4%	전자지급서비스 이용현황 (한국은행)
	온라인 쇼핑거래액	91조3,000억원 (2017년)	111조 8,939억원 (2018년)	22.6%	온라인쇼핑 동향 (통계청)
농수산업	해양 로봇 수	10종	10종	-%	해수부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	1개소 추진 ('19~'21년)	-	해수부
	스마트팜 확산	시설원예 4,010ha 축산 801호 (2017.연말)	시설원예 4,900ha 축산 1,425호 (2018.연말)	22.2% 77.9%	농식품부
	발농업 기계화율(%)	58.3% (2017년도)	60.2% (2018년도)	1.9%p	농식품부
1-2. 사회문제 해결 기반 삶의 질 제고 및 新 성장 촉진					
시티	스마트시티 확산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사업 참여 지자체)	22개	37개	68.2%	국토부
교통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88km	323km	267.0%	국토부
2. 성장동력 기술력 확보					
지능화기술	인공지능 전문기업 수	35개 ('17.12월말)	44개 ('18.12월말)	25.7%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오픈 API 이용 수	150만건	1,200만건	700%	과기정통부
	VR/AR 앱 업로드 수	-	7,065건 ('19. 4월 말)	-	과기정통부
3. 산업인프라 생태계 조성					
네트워크	AI스피커 판매대수	206만대 (통신3사+포털2사)	412.4만대 (통신3사+포털2사)	-	과기정통부
	IoT 기기연결	1,400만개 (2017.12월말)	1,865만 개 (2018.12월말)	33.2%	과기정통부

구 분	지표	조사값			관련 부처/부서
		2018	2019	증감률	
	가구별 IoT 보유기 기	0.69% (2017년)	1.2% (2018년)	73.9%	미디어패널 조 사 (정보통신정책 연구원)
	5G 지원 스마트폰 가입자수	'19년 이후	100만명 (2019.6.10.)	-	과기정통부
	10기가 인터넷망 전 국 커버리지	'19년 이후	6.86%	-	과기정통부
데 이 터	빅데이터 기술 및 서비 스 이용 여부(이용기업 수)	0.90%(33,453개) (2016년)	1.7%(66,727개) (2017년)	0.8%p	정보화통계조사 (과기정통부)
4. 미래사회 변화 대응					
핵 심 인 재	지능화 기술 핵심인 재양성	2,124명 (2018.2월 말)	7,128명 (2019.2월 말, 누적 9,252명)	235.6%	과기정통부

① 인공지능(AI) 스피커 판매대수

412만 대

200만 대



② IoT 기기 연결대수

1,400만 개 기기

1,865만 개 기기



③ 인공지능 오픈 API 이용 수

1,200만 건

150만 건



④ 인공지능 전문기업 수



⑤ 정밀도로지도 구축

1,741k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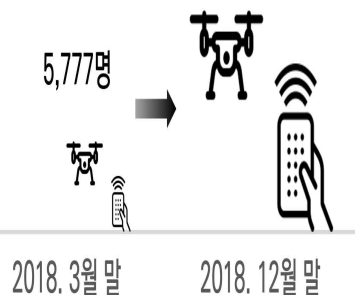
1,351km



⑥ 드론 조종자격 취득자

15,67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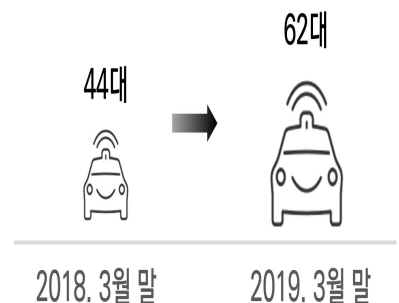
5,77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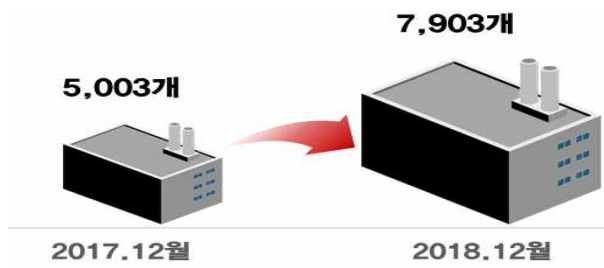
⑦ 자율주행차
임시허가 대수

62대

44대



⑧ 스마트공장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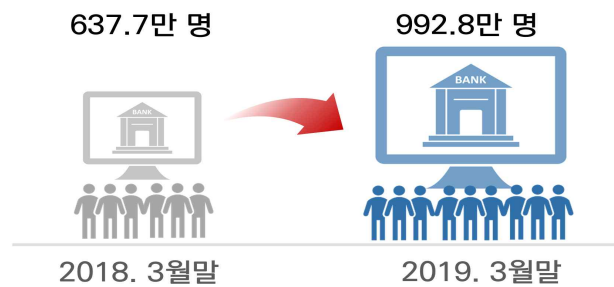
⑨ 제조업용 로봇 생산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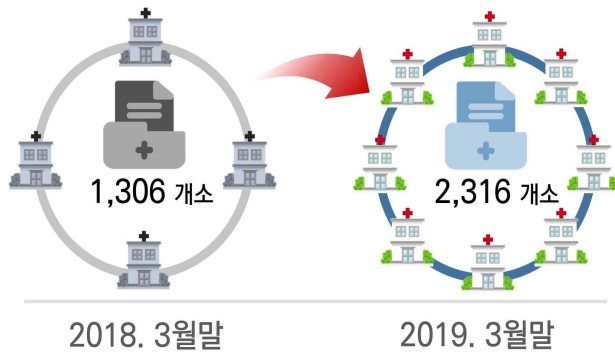
⑩ 간편 결제 · 간편 송금 서비스 이용실적 (일평균)



⑪ 인터넷전문은행 가입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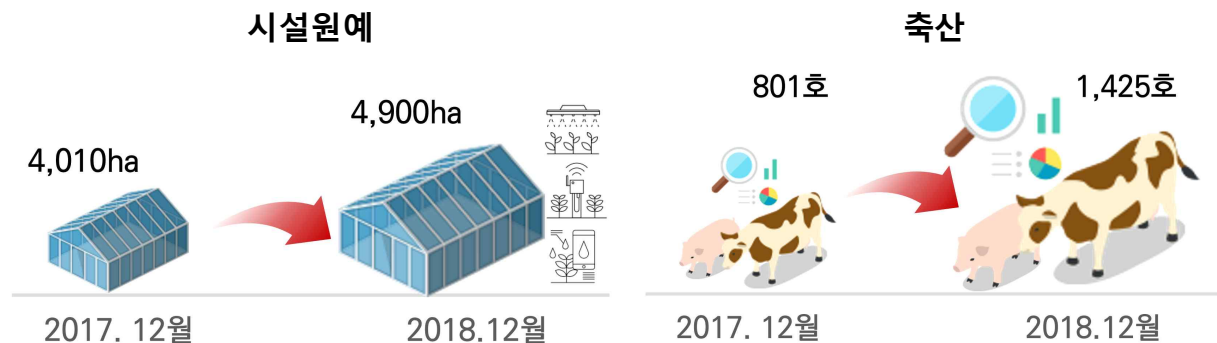
⑫ 진료정보 전자교류 참여병원



⑬ 에너지관리 시스템(EMS)



⑭ 스마트 팜 확산



저출생의 가장 큰 원인은 ‘일자리’ 와 ‘교육비’

- 문체부, 저출생 고령화 거대자료(빅데이터) 분석 결과 -

국민들은 저출생의 최대 원인으로 ‘일자리’와 ‘교육비’를 꼽았다. 출산 여성에 대한 직장 내 차별, 여성의 경력단절도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했다. 고령화 시대에 가장 필요한 대책은 ‘노인 일자리’라고 언급했으며, ‘건강’, ‘돌봄’ 문제 해결 등이 뒤를 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 국민소통실은 2017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누리소통망(SNS) 게시물 31만여 건을 바탕으로 ‘저출생 고령화’에 대한 거대자료(빅데이터)를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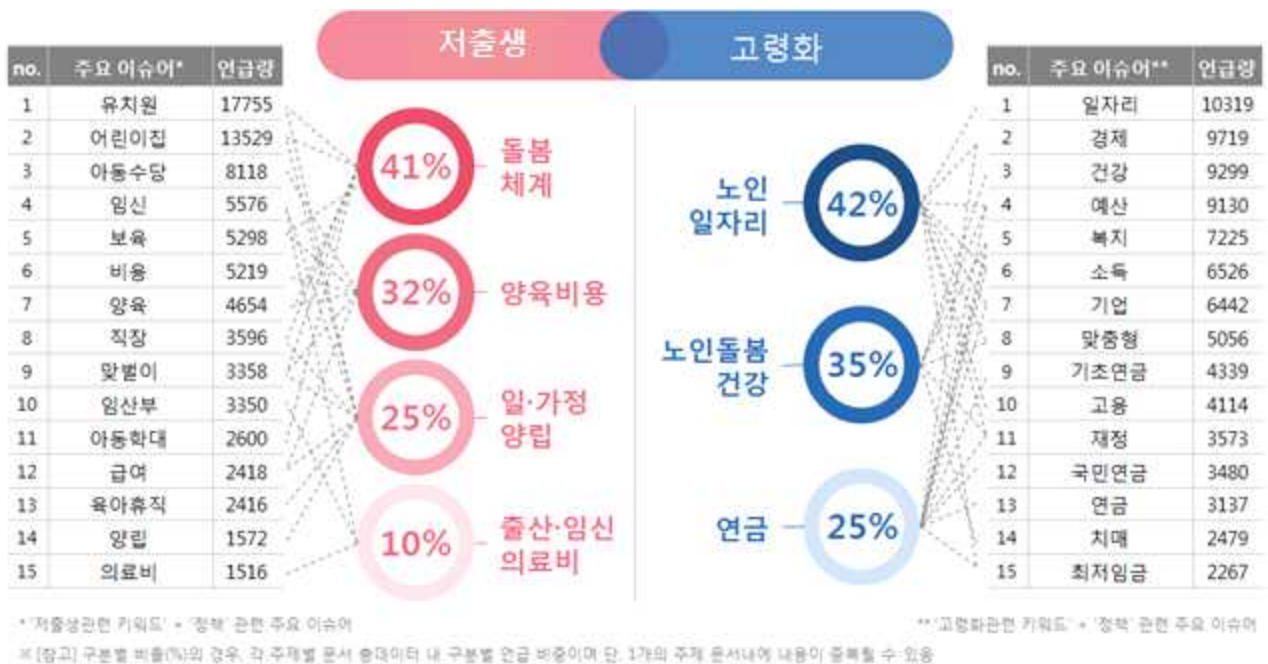
‘저출생의 원인’과 관련한 거대자료(빅데이터) 연관어를 분석한 결과, ‘일자리’, ‘교육(비)’ 등 경제적 요인과 관련한 핵심어(키워드) 언급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자리’ 연관어로는 ‘맞벌이’, ‘월급’, ‘청년실업’이 언급 순위 상위에 등장해 맞벌이가 불가피하지만 취업이 안 돼 출산을 꺼리는 상황을 나타냈다. 출산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크게 고민하는 ‘비용’은 ‘교육비’였으며, ‘주거비’가 그 뒤를 이었다.

저출생											
2017.7.1~2017.12.31			2018.1.1~2018.6.30			2018.7.1~2018.12.31			2019.1.1~2019.5.26		
no.	이슈어	언급량	no.	이슈어	언급량	no.	이슈어	언급량	no.	이슈어	언급량
1	일자리	3164	1	일자리	3065	1	일자리	3982	1	교육	2598
2	교육	2502	2	교육	2711	2	교육	2950	2	일자리	2366
3	육아	2179	3	육아	2321	3	육아	2580	3	육아	2104
4	비용	1426	4	비용	1724	4	비용	1656	4	비용	1514
5	양육	1239	5	양육	1320	5	직장	1527	5	양육	1433
6	직장	1201	6	직장	1287	6	비용	1433	6	직장	1245
7	육아휴직	922	7	비용	1172	7	양육	1360	7	비용	1201
8	비혼	894	8	주거	792	8	육아휴직	1039	8	미세먼지	730
9	주거	813	9	맞벌이	723	9	주거	1030	9	주거	730
10	차별	673	10	육아휴직	719	10	양극화	1013	10	육아휴직	686
11	맞벌이	636	11	차별	618	11	차별	917	11	차별	608
12	양극화	600	12	양극화	505	12	맞벌이	821	12	맞벌이	604
13	경력	552	13	근로시간	485	13	근로시간	531	13	경력	532
14	근로시간	387	14	경력	480	14	경력	505	14	양극화	491
15	가치관	295	15	미세먼지	419	15	가치관	482	15	낙태죄	422

[시기별 저출생 연관어 분석]

고령화 시대의 문제로 ‘건강’과 ‘독거노인’ 문제도 많이 거론됐다. 건강 문제와 관련해서는 의료비 지원을, 독거노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돌봄 서비스의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서비스 확충과 관련 ‘예산 투입’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예산’ 핵심어가 연관어 상위에 올랐다.

정부의 저출생 정책 분야와 관련해서는 돌봄 서비스 지원에 가장 관심이 높으며, 양육비용 지원, 일·가정 양립, 출산·임신 의료비 지원에 대한 관심이 뒤를 이었다. 고령화 정책 분야에서는 일자리, 돌봄, 연금 순으로 주목했다.



저출생 대책 중 돌봄 분야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보육 공공성 강화 대책에 가장 주목했다. 양육비 부담완화 분야의 최대 관심사는 아동수당이었다. 일·가정 양립 분야에서는 육아휴직 지원금 인상, 출산·임신 의료비 지원 분야에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정책에 가장 관심이 높았다.

1) 양육환경 마련

돌봄 체계

no.	주요 이슈어*	연급량
1	어린이집	8035
2	유치원	7812
3	사립유치원	4063
4	초등학교	2403
5	국공립	2311
6	보육교사	2255
7	맛별이	2097
8	공공성	1730
9	돌봄교실	1720
10	지역사회	1547
11	보육환경	1180
12	아동학대	1167
13	누리과정	977
14	에듀파인	955
15	아이돌봄서비스	828

*'보육' '돌봄' + '정책' 관련 주요 이슈어

보육
공공성 강화
55%

온종일
돌봄
30%

안전한 보육·
아동보호
21%

2) 출산·양육비 부담 최소화

양육비 부담 완화

no.	주요 이슈어*	연급량
1	아동수당	8114
2	어린이집	2019
3	다자녀	1902
4	10만원	1666
5	보육료	1383
6	유치원	1030
7	양육수당	729
8	보편	639
9	양육비	586
10	아동수당법	565
11	누리과정	408
12	사립유치원	392
13	3자녀	343
14	2자녀	319
15	무상보육	297

*'양육비' '유아학비' + '정책' 관련 주요 이슈어

아동수당
확대
65%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
32%

다자녀
지원 확대
18%

3) 양육환경 마련

일·가정 양립

no.	주요 이슈어*	연급량
1	육아휴직	2416
2	남성	1225
3	출산휴가	941
4	인식	911
5	경력단절	856
6	단축	836
7	근로시간	781
8	맛별이	763
9	분위기	652
10	불평등	423
11	배우자	401
12	통상임금	347
13	유연근무제	273
14	건강보험료	270
15	육아휴직급여	209

*'일·생활균형' + '정책' 관련 주요 이슈어

육아휴직
개편(지원금 인상 등)
50%

남성 육아참여
확대
45%

근로시간
단축
33%

4) 출산·양육비 부담 최소화

출산 의료비 등 지원

no.	주요 이슈어*	연급량
1	영유아	1469
2	산모	1443
3	신생아	1403
4	방문	1209
5	의료비	1081
6	건강보험	1033
7	건강관리	961
8	질환	668
9	본인부담금	474
10	건강관리사	436
11	진료비	385
12	영양	338
13	난임부부	302
14	시술비	265
15	인공수정	258

*'건강' '출산' + '정책' 관련 주요 이슈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53%

영유아 의료비
제로화
51%

안전한
출산
12%

고령화 대책 중 노인 일자리 분야에서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 가장 주목했다. 건강 분야에서는 건강관리 서비스와 치매 관리 서비스가 최대 관심사였으며, 연금 분야에서는 기초연금에 가장 높은 관심을 보였다.

1) 노후소득 강화

노인 일자리

no.	주요 이슈어*	연급량
1	맞춤형	1491
2	최저임금	1292
3	중소기업	1065
4	창업	969
5	임금	892
6	지원사업	803
7	정년	550
8	산업혁명	535
9	사회활동	423
10	사회서비스	363
11	공공일자리	343
12	고용시장	333
13	고용상황	223
14	고용장려금	155
15	공공근로	153

*'일자리' '고용' + '정책' 관련 주요 이슈어

일자리 양&질
73%

고용 촉진
35%

정년 연장
6%

2) 건강한 노후 환경

돌봄·건강 서비스

no.	주요 이슈어*	연급량
1	치매	2231
2	의료비	1196
3	치매안심센터	744
4	질병	614
5	건강보험	595
6	질환	582
7	진료비	410
8	치매예방	388
9	건강관리	345
10	요양보호사	327
11	간병	268
12	치매국가책임제	235
13	돌봄서비스	218
14	노인요양시설	186
15	커뮤니티케어	166

*'돌봄' '의료' '치매' + '정책' 관련 주요 이슈어

건강관리
54%

치매
43%

의료비
27%

3) 노후소득 강화

연금

no.	주요 이슈어*	연급량
1	기초연금	4342
2	국민연금	3901
3	소득	3208
4	65세	1771
5	예산	1655
6	노후	1600
7	재정	1428
8	하위	911
9	보험료율	801
10	소득대체율	776
11	기금	728
12	고갈	684
13	배우자	650
14	소득인정액	496
15	퇴직연금	420

*'연금' + '정책' 관련 주요 이슈어

연금 유형
82%

기금·재정
39%

연금 지급 기준
25%

한편, 인구정책과 관련한 인식 분석 결과 ‘정년 65세 연장’ 및 ‘가족 형태’와 관련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는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논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흐름 속에 기업의 고임금 부담, 청년 세대와의 일자리 갈등을 우려의 요인으로 꼽았다.



['인구정책' 관련 주요 관심 핵심어]

‘가족 형태’와 관련해서는 ‘1인 가구’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았으며 ‘2인 가구’에 대한 관심도 상승 추세를 보였다. 1·2인 가구는 ‘돌봄’ 문제, 한부모·미혼모 가구는 ‘양육’ 문제, 다문화 가구는 ‘차별’ 문제를 고민거리로 꼽았다.

가족 형태별 관심 추이 및 관련 이슈



문체부 국민소통실은 누리소통망 게시물을 통해 표현된 여론을 파악하고 그 흐름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2013년부터 여론 거대자료를 분석해왔다. 국민소통실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정책 관련 여론 거대자료를 꾸준히 분석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소통할 계획이다.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2020~2024년) 수립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이개호 장관,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제고 및 성숙한 동물문화 조성을 위해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년~2024년)을 마련한다.
 - 농식품부는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해 동물보호단체, 생산자단체, 지자체 등 각계의 의견수렴을 하여 6대 분야 21대 과제를 선정하였다.
 - 농식품부는 7월중에 관계부처, 동물보호단체, 지자체, 전문가 등으로 과제별 TF를 구성하고 6대분야 21대 과제와 국민의식 조사 등을 통해 제기되는 추가 과제 등에 대해 TF 논의와 각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2024년)을 수립할 예정이다.
- 농식품부가 선정한 6대 분야 21대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분야. 동물소유자 인식개선 >

세부 과제

- ① 반려견 및 소유자 교육 강화
- ② 반려견 소유자 안전관리 의무 강화
- ③ 동물학대 행위 범위 확대
- ④ 동물학대 처벌 강화 및 재발방지
- ⑤ 동물등록제 개선 및 등록 활성화

(1-1) 반려견 및 소유자 교육 강화

- 반려견 훈련 관련 국가 자격 도입 및 반려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반려견 사육방법 등 교육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한다.
- 또한, 모든 반려동물 소유자, 반려동물을 소유하려고 하는 자에 대한 의무교육 도입 방안 등도 검토한다.

(1-2) 반려견 소유자 안전관리 의무 강화

- 반려견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외출시 목줄 길이를 제한하는 등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
- 외출시 반려동물의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고 공동주택 등의 실내 공용공간(엘리베이터 등)에서는 반려견의 목걸이를 잡거나 안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 반려견 놀이터 등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시설·장소에서는 목줄 길이 가감 허용
 - ※ 현행 목줄 길이는 해당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로 규정(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 반려견 공격성 평가 도입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격성 평가 방식·절차, 수행기관 등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1-3) 동물학대 범위 확대

- 동물유기,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광고·선전하는 행위 등을 동물학대 행위에 포함하는 등 동물학대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동물유기를 동물학대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벌칙(현행 300만원 이하 과태료)을 벌금으로 상향하고,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광고·선전하는 행위도 동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는 행위와 처벌(현행 300만원 이하의 벌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현행 동물보호법 상 동물학대 행위를 한정적·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원칙 금지·예외 허용' 방식으로 전환 등 동물학대 범위를 보다 합리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한다.

(1-4) 동물학대 행위 처벌 강화 및 재발방지

- 동물학대 행위의 정도에 따라 벌칙을 차등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동물학대 행위자에게 재발방지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현행)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상해·신체적 고통을 입히는 행위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동물학대 유형(죽음/상해/신체적 고통)에 따라 벌칙을 차등화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개선) 3년/3천만원

- 동물학대행위자에게 재발방지 교육이수*를 의무화하고,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해 동물소유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동물학대 행동의 진단·상담, 소유자등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게 하기 위한 교육 등

(1-5) 동물등록제 개선 및 등록 활성화

-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동물등록 방식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한다.

- 생산·판매업자가 등록대상 동물을 판매 시 등록 후 판매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동물등록 대상월령은 현행 3개월령에서 2개월령으로 단축한다.
- 기존 동물등록방식*의 개선을 위해 바이오인식 동물등록 방식 도입을 위한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 현재 칩 삽입, 외장형 목걸이 착용 등의 방식이 있으나, 보다 간편하고 실효성 있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성 지속 제기

< 둘째 분야. 반려동물 관련 산업 개선 >

세부 과제

- ① 동물생산업 사육환경 개선
- ② 동물판매행위 관리 강화
- ③ 동물관련 서비스업 규제 합리화

(2-1) 동물생산업 사육환경 개선

- 동물 생산업의 동물복지 수준 개선을 위해 사육장 바닥 평판 비율 **상향**(30% 이상→ 50%), 사육면적 기준* 의무화 및 인력기준 강화(75마리당 1명→50)를 추진한다.

*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9는 사육설비의 가로 및 세로가 각각 사육하는 동물의 몸길이의 2.5배 및 2배 이상, 높이는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 이상일 것을 권장

(2-2) 동물판매행위 관리 강화

- 무분별한 동물거래를 제한하기 위해 반려동물 인터넷 판매 광고를

제한하고, 영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영업자 이외의 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 생산업 허가 또는 판매업 등록을 받은 영업자 이외의 자의 인터넷 판매 광고를 금지하고, 영업자도 인터넷 광고시 판매하는 개체의 금액을 표시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판매업의 영업 범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여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거래행위는 판매업 등록을 하여야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2-3) 동물관련 서비스업 규제 합리화

- ☐ 동물 장묘 방식에 수분해장을 포함*, 가정돌봄서비스**(일명 펫시터) 영업범위 구체화, 이동식 동물미용차량 등록기준*** 마련 등 반려동물 서비스 관련 영업의 기준 등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현재는 화장, 건조장 방식만 허용, 수분해장은 강알카리용액을 활용하여 동물사체를 녹이고 유골만 수습하는 방식

** 자기 주거 공간을 활용하여 타인의 반려동물을 임시로 보호·관리하는 영업

*** 소독장비, 작업대, 급·오수 탱크, 조명, 환기시설, 전기시설 등

< 셋째 분야. 유기·피학대 동물 보호 강화 >

세부 과제

- ① 유기·피학대 동물 구조 체계 개선
- ②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개선
- ③ 반려동물 인수제 도입
- ④ 사설보호소 시설·운영기준 마련

(3-1) 유기·피학대 동물 구조 체계 개선

- ☐ 유기·피학대동물 구조·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지자체에 민·관 합동

유기·과학대동물 구조반 운영을 유도하는 한편, 재난에 대비하여 반려동물 대피시설 지정, 대피 가이드라인 개발 등도 추진한다.

(3-2)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개선

□ 지자체에 관할 동물보호센터 점검 결과의 농식품부(검역본부) 통보를 의무화하고, 농식품부의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이와 함께,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입양 동물의 중성화와 동물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 '17년말 기준 전체 293개소(직영 40개소, 위탁 253개소)

(3-3) 반려동물 인수제 도입

□ 소유자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가 반려동물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소유자의 병역 의무,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부상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

(3-4) 사설동물보호소 시설·운영 기준 마련

□ 사설동물보호소 신고제 도입 및 분뇨 처리·안락사 등 사설동물보호소 시설·운영기준 마련을 추진한다.

○ 사설동물보호소 운영·관리자에게 유실·유기동물을 발견 시 지자체에 신고·인도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중성화 시술 및 CCTV 설치를 지원하여 보호동물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사설보호소의 법적 정의, 기준 등 부재하여 관리가 어려운 상황, '19년 실태조사 정책연구용역에 따르면 전국 82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

< 넷째 분야. 농장동물의 복지 개선 >

세부 과제

- ① 농장 사육단계 동물복지 수준 개선
- ② 운송·도축단계 동물복지 강화
- ③ 동물복지축산 인증 고도화

(4-1) 농장 사육단계 동물복지 개선

- 축산 농가가 준수해야할 동물복지형 축산 기준을 마련한다.
 - 절식(節食)·절수(節水)을 통한 산란계 강제 털갈이 금지, 어미돼지 고정틀(stall) 사육기간 제한 등 축산농가가 준수해야할 기준을 강화하여 농장동물의 동물복지 수준을 전반적으로 개선한다.

(4-2) 운송·도축단계 동물복지 강화

- 가축 운송차량·도축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운송·도축 단계 동물복지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4-3) 동물복지축산 인증 고도화

- 동물복지축산 인증 범위를 현행 농가 인증에서 제조·가공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가공식품 내 원재료 함량에 따른 '동물복지' 용어 사용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유기가공식품의 경우 가공장이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그 외의 경우 함량(70% 이상 여부)에 따라 제한적 표시를 허용

< 다섯째 분야. 동물실험의 3R 원칙 구현 >

세부 과제

- ① 실험동물 공급·관리 체계 강화
- ②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기능 강화
- ③ 동물대체시험법 개발·보급 체계 마련

(5-1) 실험동물 공급 및 관리 체계 강화

- 사역동물 대상 실험가능 요건*을 강화하여 실험동물 사용을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한편, 실험동물 출처의 기록·보관을 의무화하여 향후 실험동물 공급 관련 정책 방향 설정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 현재는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연구, 방역(防疫)을 목적으로 실험, 해당 동물 또는 동물종(種)의 생태, 습성 등에 관한 과학적 연구를 할 경우 예외

(5-2)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기능 강화

- 동물실험윤리위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동물실험계획서 승인 이후 감독 등 사후관리 기능 강화도 추진한다.

* 현재는 4시간 이상 교육을 1회 수강하면 윤리위원으로 활동 가능

- 실험내용에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윤리위 재심의를 의무화하고, 실험이 승인내용과 다를 경우 실험 중지 명령 등도 추진한다.

* 실험동물 종, 실험 마리 수 20% 이상 증가, 연구자의 변경, 연구목적 변경 등

- 위원회의 행정업무, 동물실험계획의 사전 검토 등을 수행하는 윤리위

행정인력의 채용기준과 실험 횟수 당 적정 인원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 동물실험시행기관 개소수 : ('11) 324 → ('14) 349 → ('17) 384 → ('18) 385

(5-3) 동물대체시험법 개발·보급 체계 마련

- 동물대체시험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 동물대체시험법을 검색할 수 있는 창구 마련,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동물대체시험법 여부 점검 체계화 방안 등을 검토한다.

< 여섯째 분야. 동물보호·복지정책 거버넌스 강화 >

세부 과제

- ① 동물복지위원회 컨트롤 타워 역할 정립
- ② 지자체 동물보호·복지 정책 추진 체계 개선
- ③ 중앙정부·지자체 인력 및 조직 확충

(6-1) 동물복지위원회의 컨트롤 타워 역할 정립

- 농식품부 동물복지위원회*의 정책 컨트롤 타워 기능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지자체·관련 단체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동물복지위원회 위원수를 확대하고, 분과위원회 구성 등 역할 강화를 추진한다.

* 현재는 10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어 참여 인원 및 기능 제한

(6-2) 지자체 동물보호·복지 정책 추진 체계 개선

- 광역시도 단위 동물복지위원회 구성 의무화를 통해 지역중심 동물보호·복지 정책 추진 기반을 구축한다.
-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 및 지역단위 정책 수립 및 집행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 현재는 매년 동물보호센터, 유실·유기동물, 영업자 등록 현황 등을 지자체 행정조사 후 그 결과를 검역본부에서 발표하고 있어 보다 심층적인 조사 필요

(6-3) 중앙정부·지자체 동물보호·복지 인력 및 조직 확충

- 동물보호·복지 정책 강화를 위해 정부·지자체 동물보호 전담인력·조직 확충, 정책 개발 및 전문성 강화 방안 등을 검토한다.

< 당부말씀 >

- 농식품부 관계자는 “7월중 구성하는 동물보호·복지정책 TF에서 금번 21개 과제와 국민인식조사 등을 통해 제기되는 추가 정책과제를 검토하여 금년말까지 동물보호·복지 5개년(20~24)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 금번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을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보다 성숙한 동물보호·복지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3대 정책으로 개선

- 제도 개선, 측정체계 개편, 지도·점검 강화 등 3대 정책방향으로 사업장 관리 실효성 높여 미세먼지 감축 목표 달성 견인 -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대기오염물질의 무단 배출, 측정값 조작 등 기업의 부실한 환경 관리 행태를 개선하고 사업장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 측정체계 개편, 촘촘한 감시 등 3대 정책 방향으로 구성된 개선대책을 추진한다.
- 6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2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 민간공동위원장 : 문길주)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개선대책’을 심의·확정했다.
- 이번 대책은 ① 사업장 관리제도 개선, ② 오염물질 측정 관리체계 전면 개편, ③ 촘촘한 사업장 감시 실시 등 3대 정책방향과 이에 따른 중점추진과제를 담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장 관리 제도 개선

- 2017년부터 시행 중인 통합환경허가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는 등 꼼꼼한 인허가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 * 허가 시 누락되는 공정·오염물질이 없고 최신의 저감기술을 적용한 사업장 관리 가능
- 환경부는 2022년까지 발전, 철강, 화학, 정유업 등 통합환경허가 대상 사업장(대기·수질 1~2종) 800개에 대해 사업장과의 자발적 협약,

업종별 상담 등으로 허가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 (현황) 통합허가대상 사업장 총 1,411개 중 20개 허가 완료

- 그 외 사업장은 배출시설 가동 후, '오염도 측정'을 의무화하여, 허가서와 실제 배출 활동을 검증하는 등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 현재는 제출서류를 토대로 허가 여부를 결정, 이후 검증·확인 절차 부재

- 대규모 산업단지와 같이 배출원이 밀집된 지역은 권역별 대기관리 체계로 전환한다.

- 대기관리권역이 현재 수도권 지역에서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 아울러, 권역내의 일정 기준 이상 배출 사업장*은 배출허용총량이 할당되어, 할당량 이내로 배출이 허용되는 총량관리제가 적용된다.

* (현행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기준) 1~3종 대기배출사업장 중 연간 질소산화물 4톤, 황산화물 4톤, 먼지 0.2톤을 각각 초과 배출하는 사업장

- 방지시설 설치 면제시설에 대한 측정을 의무화하는 등 관리 사각 지대를 해소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 방지시설 설치 면제시설*에 대해 년 1회 이상 측정을 의무화하고, 배출허용기준 강화와 연계하여 제도의 필요성 자체도 재검토한다.

* 대기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거나, 청정연료 사용 등 방지시설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 처리가 가능한 시설

- 또한, 배출 부과금 산정 시 사업자의 자가측정이 아닌 공공기관의 측정값*이나, 점검결과 등을 활용하도록 산정체계를 개선한다.

* 통합허가사업장부터 우선 적용, 이후 측정여건을 토대로 확대 검토

- 아울러, 소규모 사업장의 환경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방지시설 교체 및 신규 설치비용*과 함께 용자 지원도 병행한다.

* 2019년 1,997개 사업장 지원(추경 포함)

2. 오염물질 측정 관리체계 전면 개편

- 계약 중개기관을 신설하여 사업자와 측정대행업체간 갑을관계를 해소하고, 측정인력 기준 개편을 통한 인력 확충 등 측정 여건도 개선한다.

- 제3의 계약 중개기관을 도입하여 사업자의 우월적 행위(갑질)를 차단하고, 적정 수수료 단가 책정 등 측정대행업체의 통제(컨트롤 타워) 역할도 수행한다.

※ 배출 사업자는 중개기관에 측정대행 계약을 의뢰하고 중개기관은 측정대행업체 공모·평가를 거쳐 측정능력이 검증된 기관을 선정

- 또한, 환경부는 중개기관에서 측정대행업체 선정 시 기준으로 활용하고 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측정대행업체의 업무능력을 평가·고시*할 예정이다.

* 전년 실적, 경영상태, 시설·인력 보유현황 등을 평가하여 등급으로 고시

- 아울러, 측정인력의 기준도 개편하여 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측정분석사 의무고용제’의 조기 정착지원으로 전문성도 강화한다.

< 측정인력 기준 개편안 >

현 행	개 선
○ 분석사 또는 기사 1명, 산업기사 1명, 분석요원(기능사) 1명이 1팀	○ 기술인력 1명과 기능인력 2명이 1팀 - 기술인력(책임자) :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 - 기능인력(실무자) : 기능사 또는 <u>관련 학위 취득자</u>

-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등 부정·허위 측정을 근절하기 위해 고의적인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 배출 사업자가 측정값 조작 시, 바로 '조업정지' 처분을 적용하며, 고의적 범법 행위 시에,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 측정대행업체의 경우, 고의나 중대 과실 시 '즉각 퇴출제도(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타 업체에 재위탁 금지 규정도 신설한다.
 - 아울러, 측정인력은 거짓성적서 발급 시, 자격 정지(1년) 규정이 신설되어 처분의 실효성이 강화될 예정이다.
- 위치기반 모바일 기술 등을 활용하여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을 방지하고, 측정값의 실시간 공개를 추진한다.
- 굴뚝에 인식지표(태그)를 부착하여 실제 측정여부를 파악하고, 현장 측정값이 대기오염배출원관리시스템(SEMS*)에 자동 전송되도록 하여 조작을 방지한다.
- * 대기오염배출원관리시스템(SEMS : Stack Emission Management System)
- 또한, 자동측정기기(TMS) 등 측정값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사업장의 자발적인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한다.

3. 촘촘한 사업장 감시 실시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기인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산업단지 등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 지역별로 환경부 소속 산하 기관(국립환경과학원 등), 관할 지자체 합동으로 무인기(드론), 이동측정차량 등 최신기술을 활용하여 점검을 추진한다.
 - 또한, 사업장 내로 출입하지 않아도 원격(1~2km)에서 감시가 가능한

장비를 활용, 불시점검을 확대하여 사업장의 법규 준수성을 높인다.

○ 아울러, 정부부처-지자체가 참여하는 합동 점검과 교육 등으로 첨단 점검방법을 숙지하는 등 감시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 자동측정기기(TMS)를 활용하여 촘촘한 감시를 실시한다.

○ 대기관리권역 확대(2020년 4월 예정)와 연계하여, 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을 현행 625개에서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2,000개까지 확대한다. 중·소 사업장에는 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비를 지원한다.

○ 자동측정기기 부착 외 사업장은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감지기기(센서)*를 부착하여 조작여부의 확인(모니터링)을 강화한다.

* 방지시설에 통신기능을 탑재한 센서를 부착, 압력, 전류량, 약품투입량 등을 측정하여 적정 운영여부 확인

□ 개선대책 추진으로 사업장 인허가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반적인 사업장 관리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측정대행업체 구조 개편으로 계약의 적정 단가 마련, 계약 물량의 조정 등 시장이 정상화되며, 측정인력 확충에 따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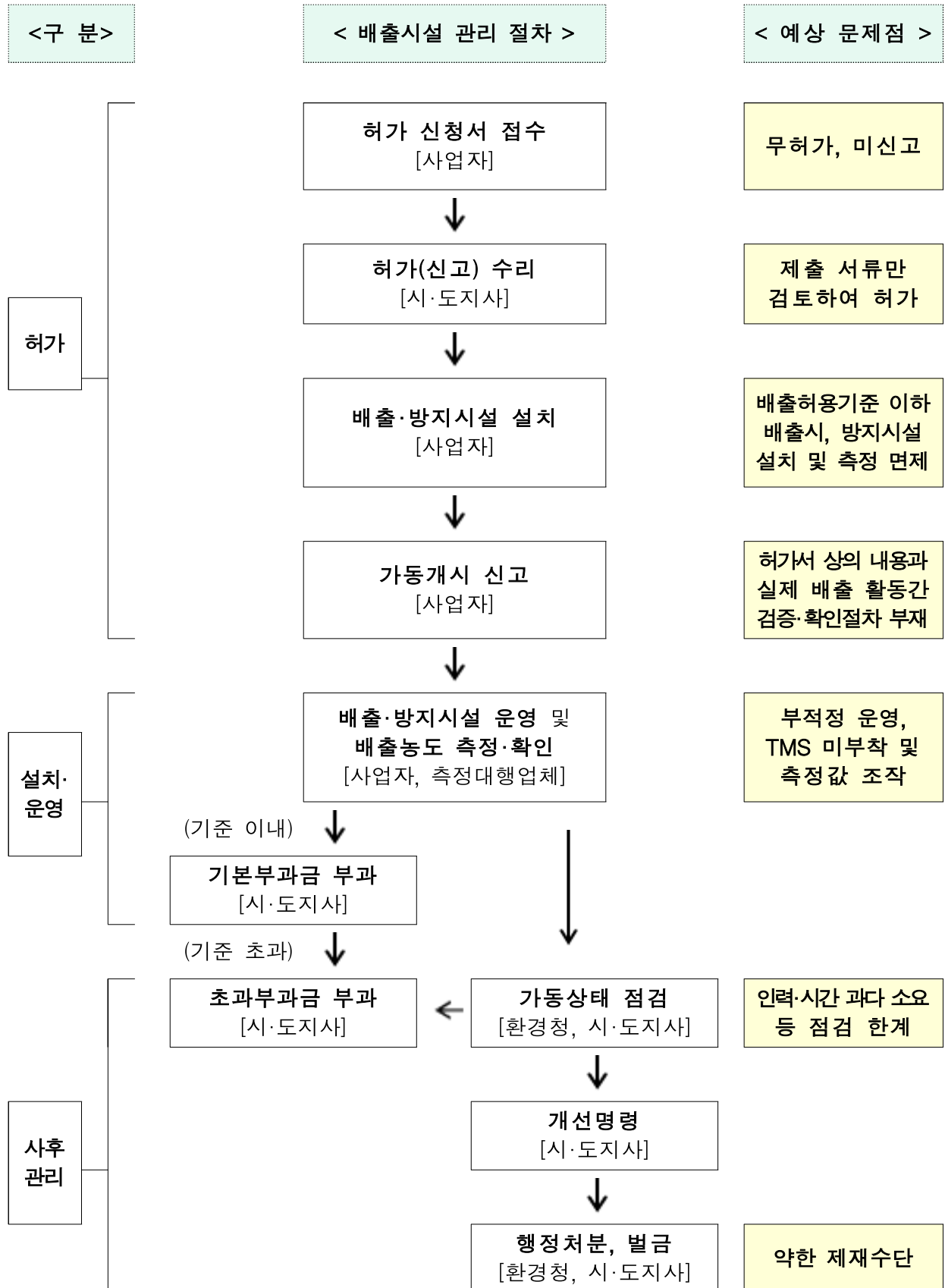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022년 미세먼지 감축 목표 달성의 성패는 사업장 관리에 달려 있다”라면서,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사업장의 법규 준수, 정책의 현장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1. 현행 배출시설 허가 체계 및 흐름도.

2. 대기배출사업장 자가측정 개요.

붙임1

현행 배출시설 허가 체계 및 흐름도



□ (목 적) 배출시설 운영시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 확인 및 환경오염 사전 예방·관리(대기법 제39조)

○ 배출업체 자체 측정 또는 측정대행업체*에 의뢰 측정

* 등록업체(674개소) : 수질 210, 대기 192, 소음·진동 154, 실내공기질 62, 악취 56

□ (운영) 배출시설 규모에 따라 매주~반기 1회 이상 측정

< 자가측정 주기 >

구 분	1종(80톤 ↑)	2종(20~80톤)	3종(10~20톤)	4종(2~10톤)	5종(2톤 ↓)
측정주기	주 1회	월 2회	2개월 1회	반기 1회	반기 1회

※ TMS 부착 사업장(자동측정항목 한정), 방지시설 설치면제 시설은 자가측정 면제

○ (측정항목)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된 대기오염물질 28종

○ (보고·기록) 1~3종 사업장은 전산시스템(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 국립환경과학원)에 입력, 4·5종 사업장은 자체 기록·보관

□ (사후 활용) 배출부과금 산정 근거자료, 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정상
운영 여부 점검, 배출수준 파악 등 사후관리에 활용

※ 자가측정 자료는 특정 시점의 배출 농도값으로 배출량 통계에 활용 곤란,
배출량 산정은 TMS 측정값 또는 연료사용량 등 활동도와 배출계수 사용

< 자가측정 결과 값 활용 모식도 >



“청년의 손으로 만드는 청년 고용 정책”

- 「제6기 청년 고용 정책 참여단」 발족 -

- 청년이 직접 청년 정책을 살펴보고 개선 의견을 내는 「청년 고용 정책 참여단(제6기)」(이하 ‘참여단’)이 7월 5일 오후 2시에 발대식을 갖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붙임1 발대식 개요]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재홍)은 이날부터 6개월간 활동할 118명의 제6기 참여단을 선발했다. [붙임2 선발 결과 상세 내용]
- 제6기 참여단에는 대학 재학생뿐 아니라 고교 재학생, 고졸 취업 준비생, 대학원 졸업자, 재직 중인 청년 등 다양한 청년이 참여했다.
- 참여단은 본인들이 관심 있는 청년 일자리 정책 분야를 직접 선택해 팀별 활동을 하며 정책 점검(모니터링)과 의견 제시 및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 제안 등을 할 예정이다. [붙임3 활동 계획]
- 참여단은 2016년부터 시작해 2018년의 제5기 참여단까지 총 63개 팀의 598명이 청년 일자리 정책의 당사자로서 의견을 제시해 왔다.
- 특히 제4기 참여단은 지난해 「3.15. 청년 일자리 대책」 수립에 참여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설계, 온라인 청년센터 신설,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 신설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등 청년 일자리 정책 수립에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 발대식에 참석한 임서정 차관은 「참여단 청년들과의 대화」 시간을 갖고 청년들의 어려움을 들으며 청년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다.

○ 임서정 차관은 “이번 참여단이 기성 세대의 눈으로 볼 수 없었던 현장의 의견을 전달해 주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며

○ “정책의 당사자인 청년들이 직접 현장에서 참신한 생각을 펼쳐 주기를 부탁드리며 청년의 의견을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정부 혁신의 의지를 밝혔다.

붙임 1. 제6기 청년 고용 정책 참여단 발대식 개요

붙임 2. 제6기 청년 고용 정책 참여단 선발 결과

붙임 3. 제6기 청년 고용 정책 참여단 활동 계획

□ 목 적

- 「제6기 청년 고용 정책 참여단*」의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소속감을 북돋우기 위한 발대식 개최

* 만15세~34세의 청년 총 118명을 선발해 청년 고용 정책 사업과 현장을 살펴보고 의견을 제시(피드백)하는 역할 수행(2019년 7월~12월, 6개월 활동)

□ 행사 개요

- 일시: 2019. 7. 5.(금) 14:00~17:30
- 장소: 서울 엘더블유 컨벤션 3층 (크리스탈홀) * 서울 중구 청파로 464 브라운스톤서울
- 참석자: (외부) 청년 고용 정책 참여단 소속 청년 110여 명, 한고원 담당자
(내부) 고용노동부 차관, 청년고용정책관 등

□ 세부일정(안)

	구 분	행사 내용	비 고
1부	13:30~14:00('30)	▪ 참석자 확인 및 준비	▪ '질문 포스트잇' 부착 (참여단 입장 시)
	14:00~14:02('02)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 사회자(한고원 김민서 대리)
	14:02~14:05('03)	▪ 고용노동부차관 인사 말씀	
	14:05~14:15('10)	▪ 6기 참여단 활동 계획	▪ 한고원 정동열 담당 팀장
	14:15~14:35('20)	▪ 2018년 참여단 사례 발표(활동 후기)	▪ 5기 장관상 시상팀
	14:35~15:15('40)	▪ 고용노동부 차관과의 대화 - 청년 일자리 어려운 점 청취 및 의견 수렴	▪ 진행: 사회자 - '질문 포스트잇' 및 현장 질의로 진행
	15:15~15:20('5)	▪ 단체 기념 촬영	
	15:20~15:30('10)	▪ 휴식	▪ 홍보 영상 송출
2부	15:30~16:10('40)	▪ 청년 고용 현황과 청년 고용 정책 이해	▪ 한고원 정동열 담당 팀장
	16:10~16:50('40)	▪ 우리 시대 청년의 삶	▪ 한고원 김강호 연구 위원
	16:50~17:30('40)	▪ 앞으로의 일정 공유 및 질의 응답	▪ 한고원 정동열 담당 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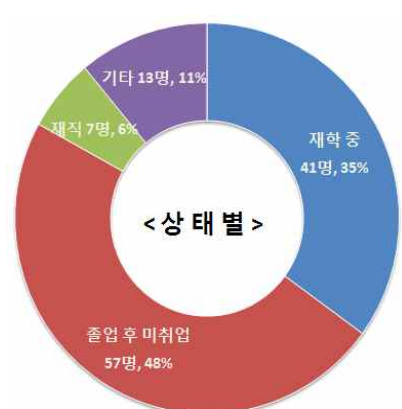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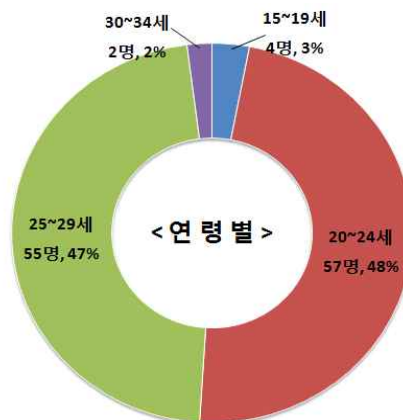
* 언론 전체 공개

□ 추진 경과

- 6기 모집공고(6.5.) →지원서 접수(6.5.~6.16.)→심사(6.17.~6.19.)
- 선발 결과 공고(6.24.)

□ 성별·지역별·연령별·정책 참여 경험별 분석 (총 118명)

영역	항목	참여단	
		인원	비율
성별	남	53명	45%
	여	65명	55%
지역	서울·인천	39명	33%
	경기·강원	25명	21%
	대전·충청·세종	17명	14%
	대구·경북	8명	7%
	부산·울산·경남	17명	15%
	광주·전라·제주	12명	10%
연령	15~19세	4명	3%
	20~24세	57명	48%
	25~29세	55명	47%
	30~34세	2명	2%
현재 상태	재학 중	41명	35%
	졸업 후 미취업	57명	48%
	재직	7명	6%
	기타	13명	11%
정책 참여 경험	있음	51명	43%
	없음	67명	57%
전체		118명	100.0%



- (경과) 2016년 7월 청년 고용 촉진 특별위원회 산하 「현장 점검(모니터링) 전문 위원회」에 「청년 고용 정책 참여단」을 설치해 운영기로 결정

*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기~5기 누계 63개팀의 598명 운영, ▲ 특히 2018년 제4기 (10개팀, 1월~5월, 250명)의 경우 청년 일자리 대책 수립에 참여(청년구직활동지원금, 온라인 청년센터,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 신설 등 의견 제시)

- (운영 방향) 청년 고용 정책을 점검(모니터링)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 제시, 이를 위해 청년 정책에 대한 사전 교육과 청년 단체와 전문가 등을 연계한 지도(멘토링) 실시

□ 세부 계획

- (모집·구성) 만15세~34세 청년 118명으로 구성, 성·연령·지역·학력·취업 상태 별로 다양한 청년을 선발

- (활동 기간 및 내용) 2019년 7월~12월(6개월)

- 선발 및 발대식(7월), 팀 구성·사전 교육 및 공동 연수*(5회, 7~8월)

* 분야별 주요 정책과 청년 세대 이해 등으로 구성, 정책 이해도 제고 도모

- 점검(모니터링)·대안 제시 및 교수 등 전문가 상담 지원(8~12월)

* '청년 고용 포럼' 등에 청년 토론자로 참여해 정책 발전 방안 논의

- 우수팀 포상(장관상, 한국고용정보원장상) 및 팀 활동 수당 지급

구 분		일정(안)	주요 내용
사전 교육	발대식	7.5.(금)	·참여단 활동 안내, 청년 고용 정책 이해 등
	공동 연수(5회)	7.5.~8.30.	·주요 정책 현황 등 설명 ·팀 구성, 팀내 토론
활동 내용	팀별 수행	9.1.~12.6.	·팀별 청년 고용 정책 점검(모니터링) 실시
	상담(멘토링)	9.1.~12.6.	·월별 1회 이상, 팀별 5회 상담(멘토링)
수료식	점검 결과	12.13.(금)	·활동 사항 발표 및 시상

- (지원 내용) 활동비, 상담(멘토링), 우수 참여자에 대한 상장, 수료증 등

양육비 지급 회피하는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도 주소·근무지 조회 가능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6월 25일부터 시행 -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양육비 청구소송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 주소나 근무지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18.12.24 개정)』을 25일(화)부터 시행한다.
 - 앞으로는 양육비 청구소송 전(前)에 비양육부·모의 소재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어,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한 양육비 문제의 신속한 해결과 소송에 따른 기간 단축 등 미성년 자녀의 복리증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지원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 이는, 비양육부·모가 미성년 자녀와의 만남을 위한 면접교섭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보다 이용한 후 양육비 이행률이 증가한다는 결과에 따른 것이다.
- * 면접교섭참여자의 양육비이행률 : ‘16년 60%, ‘17년 88%, ‘18년 90%
- 아울러,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이 면접교섭 장소 제공, 면접교섭 프로그램 운영 또는 면접교섭 지원인력 제공 등의 방법으로 면접교섭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 내용 >

(‘18.12.24. 개정, ’19.6.25. 시행)

- ①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이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지원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법률 제7조제2항제1호의2 및 제10조의2)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비양육부·모의 주소나 근무지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법률 제13조 및 제24조)
- ③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은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권자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피해자임을 알게 된 경우 가정폭력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권자의 주거·직장·연락처 등 신변 관련 정보가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가정폭력행위자인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정보보호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법률 제21조의2)

□ 이정심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양육비 이행은 자녀의 생존권과 직결된 사안으로, 개인이 아닌 사회적 차원에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라며,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양육비 이행의 중요성에 대한 범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확보 강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와 국민인식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라고 말했다.

【붙임】 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전·후 비교

□ 개정 법 시행 전 · 후 비교

- 법원의 주소 보정명령을 통해 비양육부·모의 주소지 관할로 이송하던 절차가 양육비이행관리원 내 비양육부·모의 주소·근무지 조회로 간소화되면서 업무 처리일이 평균 18~53일 단축 가능

시행 전 평균 20 ~ 60일 소요('19. 6. 24. 이전)	시행 후 평균 2 ~ 7일 소요('19. 6. 25. 이후)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 접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 접수
▼	▼
담당 부서 배당	비양육부·모의 주소, 근무지 조회 (평균 2일 ~ 7일 소요)
▼	▼
소송 제기	담당 부서 배당
▼	▼
주소 보정 (피고의 주민등록등본 제출, 보정명령 및 보정서 제출) (평균 20~30일 소요)	소송 제기 및 진행
피고 주소 변경 시 관할 법원 이송후 소송 진행 (평균 30일 소요) 피고 주소 변경이 없을 시 소송 진행	

23개 시·군 맞춤형 사업에 국토부 450억원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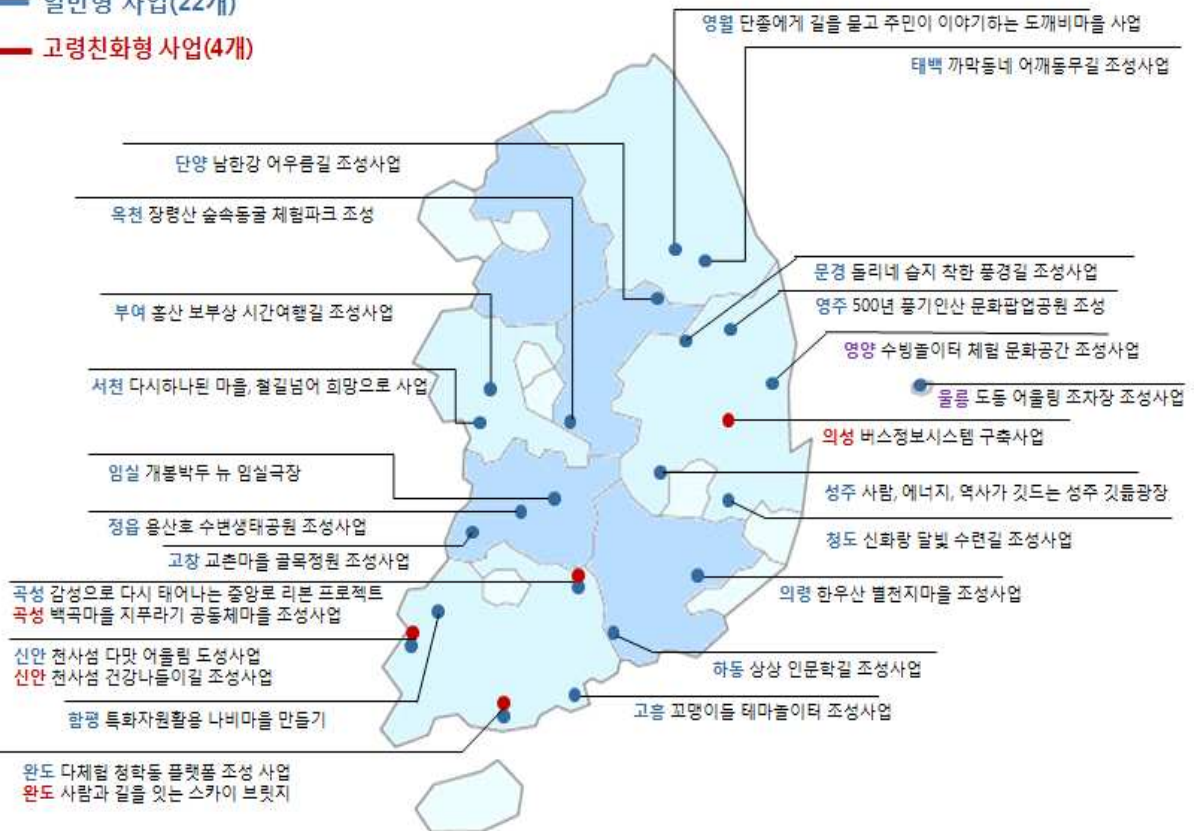
- 곡성·신안·완도·의성은 고령친화형 사업으로 첫 선정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인구유출, 소득수준 등이 낮아 지원이 필요한 낙후지역 70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으로 23개 시·군의 26개 사업을 선정했다.

2019년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 최종 지원대상(26개 사업)

— 일반형 사업(22개)

— 고령친화형 사업(4개)



- 균형발전을 위해 중점지원이 필요하여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70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것으로, 시·군에서는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의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지역자산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제안한 바 있다.**

* 「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개발수준이 저조하여 배려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인구·소득·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국토부·행안부 장관이 공동 지정·고시

- 국토부는 선정된 사업에 대해 사업별로 지방비 매칭 없이 최대 약 20억원 정도를 국비로 지원하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전문적인 컨설팅도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 사업은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토대로 지역이 주도적으로 설계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 과거 지자체의 지역개발사업은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었으나, 최근에는 인구감소 등 사회구조적 변화와 삶의 질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반영하여 **지역자산을 활용한 일자리 사업과 생활 SOC를 통해 주민 삶에 기여하는 사업이 증가하고 있다.**
- 금년 공모에서도 신안군 ‘천사섬 어울림 공간조성사업’, 고창군 ‘골목정원 조성사업’, 문경시 ‘돌리네 습지 조성사업’, 서천군 ‘폐광 활용 체험파크 조성’ 등과 같이 지역의 자연문화자산을 창의적 아이디어와 결합한 사업들이 많이 포함되었다.

(☞ 선정사업 : 붙임1)

□ 올해에는, 고령친화형 사업이 처음으로 선정된 것이 눈에 띈다.

○ 고령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지만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해 자체적으로는 고령자를 위한 생활공간 정비 등 사업이 어려웠던 지역을 지원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4곳이 선정되었다.

○ 소멸위험지역인 의성에는 대중교통 이용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한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짚풀공예 무형문화재 임채지 선생님이 거주하는 곡성 백곡마을에는 고령층을 위한 공예문화 공동체 활동이 지원된다.

- 전국 최고령 지역 중 한 곳인 신안군 압해도와 지대 차이가 심해 노약자의 이동이 힘든 완도에는 보도와 차도 분리시설, 승강기 등 고령자 보행안전 및 이동지원을 위한 사업을 시행한다.

□ 국토교통부 신광호 지역정책과장은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균형 발전을 위한 사다리를 만들기 위해 지역 주도로 지역특화자산을 활용하는 방식의 지역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 노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지역사업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붙임1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 선정 결과교

□ 일반형 사업 : 최대 20억원 지원, 22개 선정

(도별, 가나다순)

연번	지역	사업명	주요내용
1	강원 영월	단종에게 길을 묻고 주민이 이야기하는 도깨비마을	· 역사문화탐방 '도깨비탐방로, 복합어울림공간 '도깨비객주', 도깨비광장 및 도깨비길 조성, 도깨비마을 환경개선 등
2	강원 태백	까막동네 어깨동무길 조성	· 장기 미집행 도로 활용 어린이 전용 보행로 개설
3	경남 의령	한우산 별천지마을 조성	· 의령 광역산림휴양단지와 연계한 별자리 관측소를 조성하여 집객유도 및 지역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4	경남 하동	상상 인문학길 조성	· 광원마을 중심으로 상상 인문학 길 등 창의적인 문화생활 중심지 조성 및 문화공동체 운영
5	경북 문경	돌리네습지 착한풍경길 조성	·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돌리네습지를 중심으로 착한풍경길 조성,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성화
6	경북 성주	사람, 에너지, 역사가 깃드는 성주깃뚝광장	· 지역주민을 위한 복합여가공간 제공(공원, 광장 등)
7	경북 울릉	도동 어울림 주차장 조성	· 도동 어울림 주차장 조성을 통해 불법 주·정차 근절
8	경북 영주	"500년 풍기인삼 문화팝업공원"	· 인삼맨발공원, 족욕탕, 인삼 놀이터, 인삼공연무대, 주차장, 관리사무소, 영주팝업문화, 푸드트럭 운영 등
9	경북 영양	온가족이 즐기는 수빙(水氷) 놀이터 체험문화공간 조성	· 수빙(水氷) 놀이터 체험문화공간 조정
10	경북 청도	신화랑 달빛수련길 조성	· 신화랑 달빛수련길, 화랑 오계 쉼터, 신화랑 이음교
11	전남 곡성	감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중앙로 리본 프로젝트	· 중앙로 상가 외부 경관 개선, 가로 환경(공공시설물) 정비, 창업공간 조성 및 창의교육문화센터 건립 등
12	전남 고흥	꼬맹이들 테마놀이터 조성	· 해창만 관광자원 및 지역여건을 연계하여 체험 공간 및 프로그램 마련, 체류형 관광객 유인
13	전남 신안	천사섬 돛대 어울림 공간 조성	· 기존 공공 노후건물 철거 후 부지 조성(5,649㎡) - 돛대 휴게공간 및 소통공간 및 어울림 공연장 등 조성
14	전남 완도	금푸른 청학동 多체험 플랫폼 조성	· 웰컴센터 리모델링 등을 통한 관광객과 지역주민 교류공간 확보 및 소득 창출 공간 마련

연번	지역	사업명	주요내용
15	전남 함평	나비 다시날다! 함평 특화자원 (나비·국화)활용 나비마을 만들기	· 게스트하우스, 유리온실 국화분재재배·나비사육사업 등 일자리·소득창출
16	전북 고창	“같이, 가치를 만들다” 교촌마을 골목정원 조성	· 교촌마을 골목정원 조성사업
17	전북 임실	개봉박두 뉴-임실극장	· (구)임실제일극장 리노베이션
18	전북 정읍	용산호 수변생태공원 조성	· 용산호 수변생태공원 조성
19	충남 부여	천년 붓집장수 “홍산 보부상 시간여행길” 조성	· 특화가로 “홍산 보부상 시간여행길” 조성 · 홍산 역사문화전시관 및 특화가로, 문화다방 등 조성
20	충남 서천	다시 하나된 마을, 철길너머 희망으로(路) 사업	· 서천화령 폐선부지 활용 주민 복합문화공간 조성
21	충북 단양	남한강 어우름길 조성	· 남한강 어우름길 조성
22	충북 옥천	장령산 숲속 동굴 체험파크	· 갯도레일카, 체험부스(증강현실), 갯도열차 등 동굴체험파크 조성

□ 고령친화형 사업 : 최대 2억원 지원, 4개 선정

연번	지역	사업명	주요내용
1	경북 의성	의성군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사업	·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2	전남 곡성	백곡마을 지푸라기 공동체마을 조성	· 마을 특화자산 짚풀공예 보존·활성화 및 고령자를 위한 쾌적한 공동생활공간 조성
3	전남 신안	천사 섬 건강 나들이길 조성	· 고령자 이용 보행길 안전정비를 통해 노인들의 생활여건 개선 및 시각적인 환경 정비
4	전남 완도	사람과 길을 잇는 스카이 브릿지	· 지형상 고저차 극복을 위한 승강기 도입을 통해 노령자 및 사회적 약자의 보행환경 개선

해양사고 발생 시 '선장 비상대응 매뉴얼' '나왔다'

- '생명보호'에 최우선 가치, 선장의무에 비상상황 시 최종퇴선 등 기술 -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박준권)은 해양사고 시 승객 및 선원의 생명 보호를 위해 선장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선장 비상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선박사고가 발생했을 때, 선장이 당황하여 짧은 시간(골든타임)에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러한 때, 잘못된 결정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선장의 위기대응능력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 선장의 위기대응 사례

지난 2009년 일본 화객선 아리아케호(7,910톤)가 항해하던 중 파도와 화물이동으로 인해 선박이 우현으로 40도까지 기울었지만, 선장의 신속한 구조요청과 퇴선조치로 승객 7명과 승무원 21명이 모두 무사히 구조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대형 인명피해 해양사고사례를 분석하여 선장 비상대응 매뉴얼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민·관 전문가 협의회* 등의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선장포럼, 해기사협회, 해양안전진흥협회, 한국선급, 선사 등

선장 비상대응 매뉴얼은 ▲ 선장 및 선사의 의무 ▲ 선장의 기본 직무지식 ▲ 해양사고 주요사례 분석 ▲ 상황판단 원칙 ▲ 단계별 상황판단 절차 ▲ 퇴선 결정 시 고려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승객과 선원들의 생명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사고에 대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사고 발생 시 비상상황의 심각성과 급박성을 기준으로 상황을 3단계*로 구분하여 판단하도록 하였고, 상황별 대처방법을 제시하였다.

* 통제가능 상황(주의, YELLOW단계), 심각한 상황(퇴선고려, RED단계), 즉시 퇴선 상황(퇴선실시, BLACK단계)

해양수산부는 선사 및 교육기관에서 이 매뉴얼을 관리자급 해기사에게 교육하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선장 비상대응 매뉴얼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선장 비상대응 매뉴얼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누리집(www.kmst.go.kr)에서 내려 받아 활용할 수 있다.

□ 제1장 일반사항

- 해양사고 발생 시 선장의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정(제정 배경)
- 실제 상황에 맞추어 매뉴얼을 유연하게 적용(적용 일반)

□ 제2장 선장·선사의 의무

- 선장이 선박안전을 위해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선장의 의무)
- 선장의 안전향해 지원 및 선장의 의사결정 존중(선사의 의무)

□ 제3장 선장의 기본적 직무지식

- 국제협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선장이 숙지해야 할 사항 및 비상 상황 시 선박의 복원성 관련 지식 일반(직무지식 및 복원성)

□ 제4장 해양사고 주요 사례 분석

- 주요 해양사고 발생원인 및 대형 인명피해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선체손상으로 인한 사고유형과 선체손상이 없는 사고유형에 따른 사고상황 분석(사고발생 원인 및 사고유형별 분석)

□ 제5장 상황판단

- 비상상황 시 심각성과 급박성을 기준으로 상황을 구분하여 판단하되, 기상·화물·선령·침몰시간 등도 고려(상황판단 일반 및 고려사항)

□ 제6장 단계별 상황판단 절차

- 비상상황 시 심각성과 급박성을 고려하여 통제가능 상황(YELLOW 단계), 심각한 상황(RED단계), 즉시퇴선 상황(BLACK단계)으로 구분

□ 제7장 퇴선 시 고려사항

- 비상상황 시 침몰·전복 등에 소요되는 시간, 구명설비 작동 조건, 기상상태, 구조시간 등을 고려하여 퇴선결정(퇴선결정 시 고려사항)

□ 비상대응 매뉴얼의 의의는?

- 비상대응 매뉴얼은 선박 사고상황의 심각성과 급박성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기준을 처음으로 선장에게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 지금까지는 사고발생시 선장의 상황판단과 대처방법이 얼마나 적절하였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을 하지는 않았다.
- 앞으로 매뉴얼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사고발생시 어떻게 상황을 판단하고 조치할 것인지 평소에 충분히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게 됨에 따라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가 나더라도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 비상대응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 선박사고 발생 시 상황을 판단하는 기준과 상황에 따른 주요 조치내용, 퇴선결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담고 있다.
- 이에 더해, 선장과 선사의 일반적인 의무, 그리고 선장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직무지식이 포함되어 있고, 해양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과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원인도 분석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해양사고 사례도 포함되어 있다.
- 기본적으로 과거 사고사례에서 어떤 잘못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는지를 분석하여 유사사고 발생시 잘못된 대처를 하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 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사고발생시 상황의 심각성을 우선 판단하고 그 상황에 맞는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함에 따라 심각성과 급박성 등을 기준으로 상황을 3단계로 구분하여 판단하도록 하였고, 각 상황 단계별로 주요 대처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 * 통제가능 상황(주의, YELLOW단계), 심각한 상황(퇴선고려, RED단계), 즉시 퇴선 상황(퇴선실시, BLACK단계)
- 또한, 사고발생시 선장은 승객과 선원들의 생명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하여

사고에 대처하도록 하였으며 사고시 선박의 안전이 확실한 경우 외에는 선제적으로 비상대피장소 이동을 적극 시행하도록 하였다.

□ 선원과 승객을 보호하는 것이 선장의 윤리적인 의무인데 이런 내용도 포함되었는가?

- 매뉴얼에서는 선장이 승객과 선원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윤리적인 문제 이전에 선장의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 매뉴얼은 강제규정인가?

- 강제규정이 아니다. 매뉴얼은 선장이 평소에 해양사고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여 비상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 이것은 매뉴얼에서 언급하고 있는 상황과 현장상황이 정확히 일치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선장이 매뉴얼을 바탕으로 스스로 현장상황을 판단하고 대처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 강제규정이 아니면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닌가?

- 사고상황은 매뉴얼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은 선장이 현장상황과 여건에 따라 대처할 수밖에 없다.
- 매뉴얼을 굳이 강제화하지 않아도 평소에 교육 및 토론 등을 통해 숙지하고 있으면 이를 바탕으로 사고시 정확한 상황판단 및 대처를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실효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 다만, 선장이 되려면 매뉴얼 교육을 받도록 강제화하는 것은 추후 필요시 검토할 수는 있을 것이다.

□ 매뉴얼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것인데 사고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가?

- 기존 해양사고의 발생 원인을 분석해보면 적절한 사전 대처를 통해 사고

를 방지할 수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해양사고 사례 분석을 통해 사고원인을 인식하고 있으면 동일 또는 유사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상대응 매뉴얼이 사고예방에도 매우 유용할 것이다.

□ 매뉴얼 개발 경위는?

-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과거 사고사례를 보면 선장이 적절하게 대처하였다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안타까운 사고사례가 다수 있다.
- 사고발생시 선장의 적절한 대처가 인명피해 규모를 대폭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선장의 비상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번에 매뉴얼을 개발하게 되었다.
- 해수부에서는 '18년도에 선장의 비상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결정하고, '18. 3 ~ 12월까지 선장의 비상대응 역량 강화방안 연구용역을 시행하였고 작년 12월에 매뉴얼 초안을 개발하여 전문가 자문 및 선사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이번에 매뉴얼을 최종 확정하게 되었다.
- 당초는 '18.12월에 매뉴얼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매뉴얼의 중요성을 감안, 세부내용에 대한 전문가 자문 등에 다소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 매뉴얼의 활용계획은?

- 선사에 배포하여 선사 내부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 해기사 교육기관에서 예비선장을 포함한 선장들에게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 선장이 되기 전부터 교육과 토론 등을 통해 자연적으로 정확한 상황판단과 사고대처법을 숙지하게 되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또한, 세계해사기구(IMO)에 전 세계적으로 선장에게 이와 유사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제안할 계획이며, 앞으로 더 많은 사고사례를 분석하고 연구하면서 매뉴얼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다.